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255-10

www.mogef.go.kr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여성가족부

Contents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3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5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6
4.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8
5.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9

II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7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9
가. 개요	19
나. 추진 절차	19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21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23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6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26
(1) 선정 기준	26
(2) 선정방식 및 절차	26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7
2) 분석평가서 작성	28
(1) 분석평가 지표	28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9
(3)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31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41
가. 개요	41

나. 분석평가 시기 및 추진 절차	41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42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44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47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47
(1) 선정 기준	47
(2) 선정방식 및 절차	47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48
2) 분석평가서 작성	49
(1) 분석평가 지표	49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50
(3)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54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63
가. 개요	63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6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	64
라. 추진 절차	65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66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68
마.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70
1) 체크리스트 작성	70
(1) 작성 기준	70
(2) 작성방식 및 절차	70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71
2) 분석평가서 작성	72
(1) 분석평가 지표	72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73
(3)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77
바.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	83
1) 추진 배경	83
2) 필요성	83
3)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포인트	87
(1)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의 유형	87
(2)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 분석평가 시 주요 점검할 사항	88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03
가. 개요	103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103
다. 분석평가 점검내용	103
라. 추진체계	104
마. 추진절차	104
바. 세부작성요령	104
사.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106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108
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108
나. 법령·계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114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서식	116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118
가. 작성 기관	118
나. 제출 기한	118
다. 작성 내용	118
라. 참고사항	119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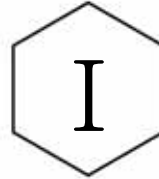
127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129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131
가. 정책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131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131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131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132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37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37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139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140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140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140
다. 실무담당자 지정	140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41
가. 평가기관의 기능	141
나. 평가기관의 지정	142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145
가. 개요	145
나. 특징	146
다. 주요기능	147
라. GIA시스템 사용도	148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152
바. 시스템 이용 문의	152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152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153
가. 개요	153
나. 2017년도 교육과정	153
다. 내용	155
라. 교육 관리	155
6. 민관협력체계 구축	157

1. 관계 법령	16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61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174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176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179
마. 지방회계법(관련 조항)	180
바. 통계법(관련 조항)	181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187
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189
가. 법령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189
나.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190
다. 계획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190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사례	191
3.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192
□ 중앙행정기관	192
□ 광역자치단체	197
□ 기초자치단체	201
□ 시·도교육청	203
4.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204
가. 국내 사이트	204
나. 해외 사이트	205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4.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5.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함)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함)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석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근거 : 영 제3조)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 사업 →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
 -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범위 명확화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적용 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실시 방법(법 제18조 관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분석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인 경우) * 정부홍보사업의 경우 GIA시스템에서 점검 항목 점검 후 종료(필요시 컨설팅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정책개선 실적 관리 •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인 경우) • 분석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 관리는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 * 정부홍보사업의 경우 GIA시스템에서 점검 항목 점검 후 종료(필요시 컨설팅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 성별영향 분석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협조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의견표명 및 반영결과 점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협조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 결과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의견표명 및 반영결과 점검
분석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제출 (다음년도 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 종합분석보고서 공표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정책개선 실적관리(법 제12조 관련)

(1) 개선의견 반영계획 관리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정책을 대상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확인 후 개선의견 수용 여부 등을 관리
 - ※ GIA시스템>성별영향분석평가>반영계획 관리 메뉴 이용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중 하나를 체크하고 확인 후 과제별 수용 항목 및 불수용 사유 등을 GIA시스템에 입력하여야 과제가 종료됨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 검토의견으로 통보한 개선항목 수가 아닌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개선의견을 수용한 항목 수를 의미함(하나의 과제에서 여러 개의 개선항목이 나올 수 있으며, 수용한 항목 수만큼 표시)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2) 개선실적 점검

- 법령 : 2012~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예정
- 계획·사업 : 2015~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2015년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종합분석보고에 관한 사항

(1)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제출(영 제6조)

- 기관별로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2월말까지)
- ※ 자세한 내용은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부분 참조

(2) 종합분석보고서 작성·제출(법 제12조 및 영 제9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
 -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제출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에 따라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4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추진일정

시 기	주 요 내 용
연 중	<p>【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법령 :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실시시기 : 관계부처/부서 협의 시 분석평가 실시 •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 : 온·오프라인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 실시시기 : 홍보물 시안 확정 전 •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실시시기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 <p>【여성가족부 & 각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1월중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실적 보고
2월말까지	【각 기관】 2016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3월말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4월말	<p>【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대상과제 선정 및 분석평가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을 대상 * 가급적 신규과제 30% 발굴
7월	<p>【여성가족부】 제12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선정된 우수기관, 우수공무원 포상
정기국회 이전	<p>【여성가족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종합 분석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8월말까지	<p>【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11월(예정)	【여성가족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12월(예정)	【여성가족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개최
12월말	<p>【여성가족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p> <p>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통보</p>

5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I.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5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 정부홍보사업(인쇄물)의 경우 분석평가서만 제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신설)	5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운영체계 * 정부홍보사업의 경우 GIA시스템에서 점검 항목 점검 후 종료(필요시 컨설팅 요청)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정책개선 권고·의견표명 및 반영결과 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6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2) 개선실적 재점검 ○ 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개선예정이거나 개선완료되지 않은 정책을 대상으로 실제 개선 현황을 점검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예정 ○ (2차점검) 2014년 개선 예정과제에 대해 시행 ○ 기존 미완료과제 재점검(중앙행정기관) － 2013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 － 2012년 개선과제 중 미완료된 과제 (신설)	6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2) 개선실적 점검 ○ 법령 : 2012~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 점검하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 예정 ○ 계획·사업 : 2015~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2015년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9	5.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II.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11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나. 추진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에 관한 법령 〈신설〉 (중략)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서식 및 효력에 관한 법령 (이하생략)	19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나. 추진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 <u>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u> － <u>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u> (중략)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u>효력에 관한 법령</u> (이하생략)
18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 분석평가서 작성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29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 분석평가서 작성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에 작성 요령 안내 포함 ☞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간소화
		31	(3)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뒤에 예시 배치
40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 분석평가서 작성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신설〉	50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 분석평가서 작성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에 작성 요령 안내 포함
		54	(3)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뒤에 예시 배치
47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작성(‘17년 예산안) 시 <u>세출예산</u>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63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 ‘18년 예산안 <u>세출예산</u>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거나, ‘17년 예산서 중 <u>계속사업</u> 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54	<p>마.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p> <p>1) 체크리스트 작성</p> <p>(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p>	71	<p>마.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p> <p>1) 체크리스트 작성</p> <p>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p> <p>☞ 체크리스트 서식상 사업 구분 구체화</p> <p>☞ 정책 분야 보완(과학기술, 지역개발)</p>
57	<p>2) 분석평가서 작성</p> <p>(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p> <p>〈신설〉</p>	73	<p>2) 분석평가서 작성</p> <p>(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p> <p>☞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에 작성 요령 안내 포함</p> <p>☞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보완(예산근거 구체화)</p>
	〈신설〉	77	<p>(3)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p> <p>☞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뒤에 예시 배치</p>
	〈신설〉	83	<p>바.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안내</p>
65	<p>4. 정부홍보사업(인쇄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p> <p>가. 개요</p> <p>–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광역지방 자치단체(시·도)에서 분석평가 추진</p> <p>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p> <p>○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쇄홍보물</p> <p>– 2016년도는 포스터,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부착하는 인쇄홍보물을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실시</p>	103	<p>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p> <p>가. 개요</p> <p>–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 단체(시·도, 시·군·구)에서 분석평가 추진</p> <p>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p> <p>○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p> <p>– 2017년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경로를 통한 정부홍보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 실시</p>
69	◇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및 예시	108	<p>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 계획서 서식</p> <p>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 통보서 서식</p> <p>☞ 법령·계획·사업 서식 통합</p> <p>☞ 자체개선안 및 개선의견 작성을 점검항목별로 구체화하도록 제시문을 추가하여 유형별 사례관리 강화</p>
82	◇ 반영결과 제출서 서식 및 예시	114	<p>나. 법령·계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p> <p>☞ 법령·계획·사업 서식 통합</p> <p>☞ 개선의견에 대해 항목별 반영계획을 작성 하도록 하여 이행점검 강화</p>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84	5.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다. 작성 내용 〈신설〉	118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다. 작성 내용 ☞ 우수사례 제출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추천사례 포함
85	라. 참고사항 〈신설〉	119	라.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포상 주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SC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에 대한 성과 평가 반영 여부 • (지자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활성화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의 충실성 •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여부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 시설·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추진 실적 •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성별 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95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신설〉 〈신설〉	129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가. 실시주체 ○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0조) ○ <u>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0조의2)</u>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7.6.21. 시행) 사.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상정책 선정 및 정책개선 추진사항을 점검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통하여 대상 정책 선정, 추진방법 등 컨설팅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개정 법 제10조의2 제3항)
99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가. 정책개선의 권고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정책개선을 권고</u> 할 수 있음	131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가. 정책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정책개선을 권고</u>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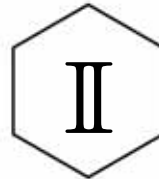
IV.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108	2. 분석평가책임관 <신설>	140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다. 실무담당자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실무담당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분석평가 운영
109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가. 평가기관의 기능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142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가. 평가기관의 기능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110	나. 평가기관의 지정 4) 지정 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143	나. 평가기관의 지정 4) 지정 대상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112	○ 평가기관 지정현황('16.1월 기준)	144	○ 평가기관 지정현황('16.12월 기준) ☞ 지정현황 '16.12월 기준 현행화

V. 참고자료

종 전 (2016년)		개 정 (2017년)	
페이지	내 용	페이지	내 용
129	1. 관련 예시	31,54,77	☞ ‘Ⅱ.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관련 예시’ 이동
154	2. 관계 법령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161	1. 관계 법령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6.12.20. 공포, ‘17.6.21. 시행) 추가
180	3.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189	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183	4.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	192	3.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 중앙행정기관 계획 목록 ‘16.12. 기준 현행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 **【중앙행정기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7조)
* 해당 법령안의 관계 부처 협의 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지방자치단체】**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조례·규칙)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에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4조)
* 해당 자치 법규안의 관계 부서 협의 시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나.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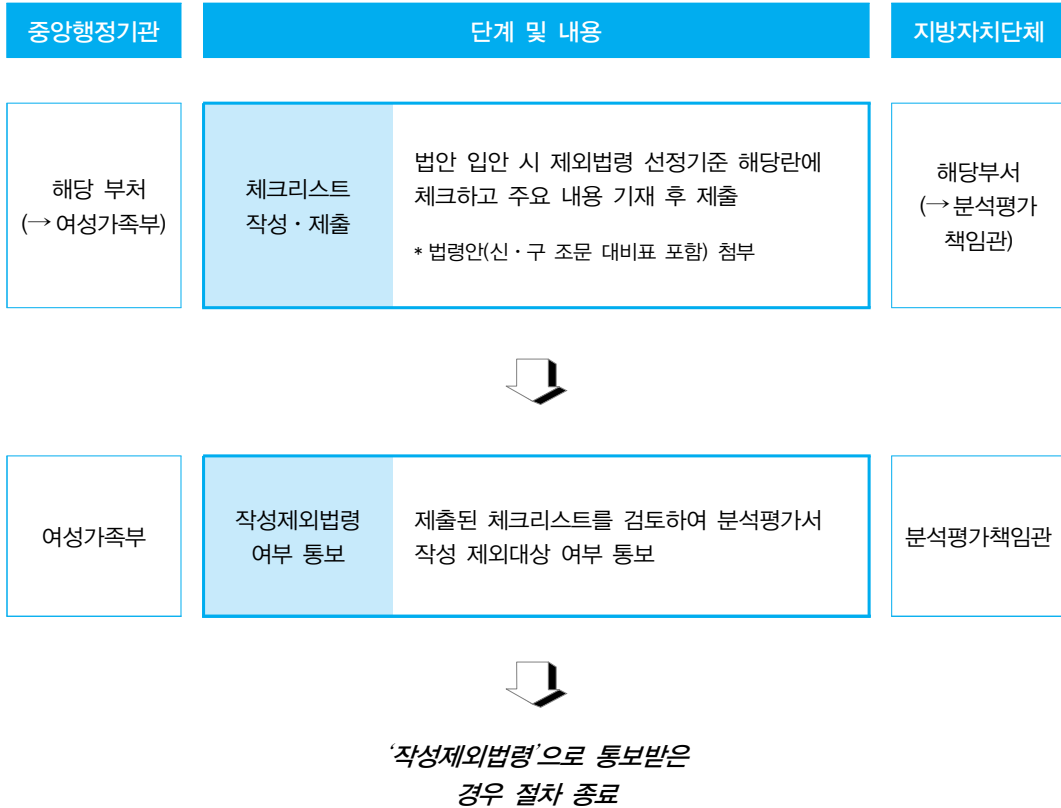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 구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 →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에 관한 사항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및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 작성제외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제·개정 추진 법령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 제·개정 조항 전체가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법령’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법령’ 참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작성 ·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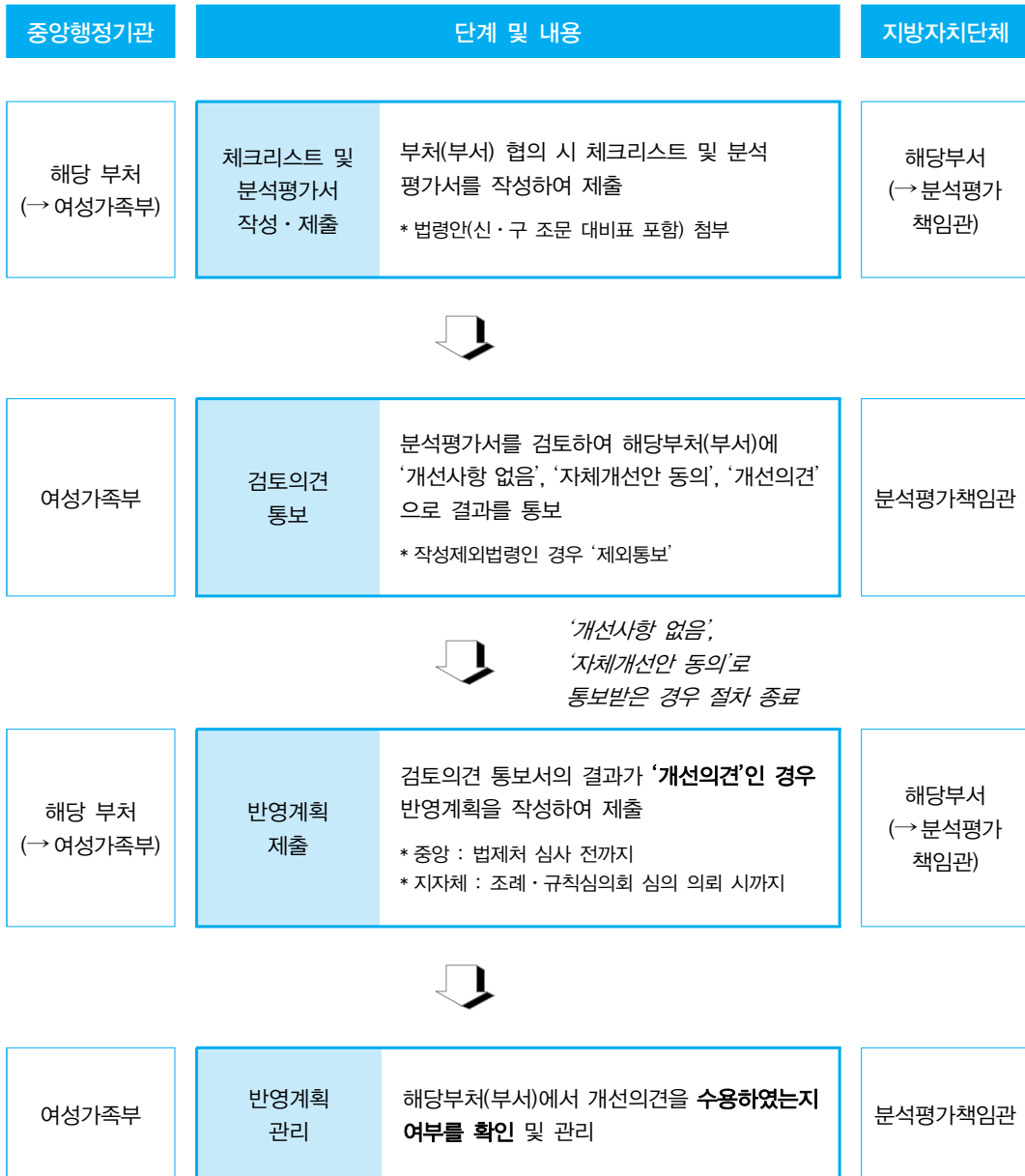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2)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 여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법령인지 여부를 통보
- 체크리스트에 대해 ‘작성제외법령’ 통보
 - **(작성제외법령 통보)** 해당 법령안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법령임을 확인 · 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 작성제외법령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는 해당기관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참조(p.24)
-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 · 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법령안 부처/부서 협의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 책임관에게 법령안(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첨부하여 제출

(2)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제·개정 법령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여성가족부에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에서는 반영계획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심의 의뢰 시까지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 심사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법령안은 차관회의에 상정 불가

(4) 반영계획 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되어 법령안이 제·개정 되었는지를 지속 관리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법령에 대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 다만 제·개정되는 부분이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법령은 체크리스트만 작성

선정 기준	
작성 제외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구, 직제, 기록물,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 물품,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에 관한 법령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을 단순 변경하는 법령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2017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2) 선정방식 및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법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만 제출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통보
- ‘제외통보’를 받은 경우 분석평가 절차를 종료하고,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제·개정되는 부분이 제외법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
 -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예'로 체크한 경우, 주요 내용란에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기재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구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7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년 월 일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 지표

- 제·개정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는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에 대해 3개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p>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예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과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을 다르게 판정하는 부상의 등급 판정 규정이나 혼·포장 수여 시 남성과 여성의 훈장 크기를 달리하는 규정</p> <p>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표현하는 규정은 '자-손자'로 표현되는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한 우리 사회의 성별고정관념을 드러냄</p> <p>1-3.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으로 상시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반영</p> <p>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예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설하면서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성 불임에 대한 고려가 없을 뿐 아니라 불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하는 여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가 대상이 되어야 함</p>
II. 성별 특성	<p>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II. 성별 균형 참여	<p>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p> <p>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p>
IV. 성별 통계	<p>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p>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개정 목적

- 해당 법령의 제·개정 목적을 간략하게 기술

■ 제·개정 주요 내용

- 해당 법령의 주요 제·개정 내용을 기술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input type="checkbox"/>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 <th>수정안</th>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 필요시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1-3. 제·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 <th>수정안</th>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 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th>수정안</th></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② 성별 특성	<input type="checkbox"/> 2. 제·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th>수정안</th></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③ 성별 균형 참여	<input type="checkbox"/>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th>수정안</th></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input type="checkbox"/>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th>수정안</th></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④ 성별 통계	<input type="checkbox"/>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또는 이유 제시 <table border="1"> <tr> <th>제·개정안</th><th>수정안</th></tr> <tr> <td></td><td></td></tr> <tr> <td></td><td></td></tr> </table>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제·개정안	수정안				
제·개정안	수정안								

제출일 : 년 월 일

(3)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에너지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2015)

I. 개 요

■ 제·개정 목적

- 에너지이용권을 신규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에너지법」이 개정(법률 제12931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지원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제·개정 주요 내용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
 - 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등으로 정함

에너지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2015)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② 성별 특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제13조의2 1.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제13조의2 제1호의 '수급자 중' 임산부를 포함
③ 성별 균형 참여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 〈해당 조항〉

- 제13조의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여부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임산부는 모성보호,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하여 건강과 관련되는 거주환경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에너지이용권의 수급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가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에너지 소비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여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정은 사정이 더 안좋을 것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임산부를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정책 추진할 경우 임신·출산으로 인한 가계빈곤화 예방 및 빈곤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극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노인,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임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영유아·장애가구원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권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_____ _____노인·임산부·영유아 _____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2015)

I. 개 요

■ 제·개정 목적

-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 내용

- 법률의 한글화, 일제식 한자어·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input type="checkbox"/>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료)	○ 제772조, 제781조, 제846조, 제908조의2 등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자, 양자, 친생자, 친양자 등 용어는 양성 평등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로 보아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친양자녀 등으로 용어를 개선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2015)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② 성별 특성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③ 성별 균형 참여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종료)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유기술, 종료)	

I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 성별 특성 고려 /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

■ 〈해당 조항〉

○ 第772條(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① 養子와 養父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入養한 때로부터 婚姻中の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② 養子の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前項의 養子の 親系를 基準으로 하여 寸數를 定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2015)

-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第846條(子の 親生否認) 父부의 立場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 子が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여부

■ 〈필요성 및 분석 근거〉

- 자, 양자, 친생자, 친양자 등 용어는 양성 평등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로 보아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 친양자녀 등으로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第772條(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① 養子와 養父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入養한 때로부터 婚姻中の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 ② 養子の 配偶者, 直系卑屬과 그 配偶者는 前項의 養子の 親系를 基準으로 하여 寸數를 定한다.	제772조[양자녀(養子女)와의 친족관계와 촌수] ① 양자녀와 양부모,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 간의 친족관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녀의 배우자, 양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녀의 성과 본) ①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第846條(子の 親生否認) 父부의 立場은 第844條의 境遇에 그 子が 親生子임을 否認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제846조[자녀에 대한 친생부인(親生否認)] 제844조의 경우에 부부 중 한쪽은 그 자녀가 친생자녀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훈법 시행령(행정자치부, 2015)

I. 개 요

■ 제·개정 목적

- 서훈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부·처·청 등)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고,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의 크기에 있어 남·여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개정 주요 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개정)
 -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뿐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것으로 확대함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1등급 훈장 크기 남·여 구분 폐지(안 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삭제)
 -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1등급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의 남성용·여성용 구분을 폐지하여 현재의 남성용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상훈법 시행령(행정자치부, 2015)

II. 분석평가항목별 점검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 조항 유무	해당조항	필요성	개선안	개선안 기술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 있음 (→) □ 없음 (종료)	제13조 제1항	해당조항 개선 필요성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여성용 훈장 관련 별표 3 삭제
② 성별 특성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 - 시설 설치,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하였습니까? - 통계나 실태조사 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는지 점검하였습니까?	□ 있음 (→) ■ 없음 (종료)		성별특성 반영 필요성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③ 성별 균형 참여	■ 위원회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까?	■ 있음 (→) □ 없음 (종료)	제2조 제1항	성별균형 참여 필요성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 있음 (→) □ 없음 (이유기술, 종료)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상훈법 시행령(행정자치부, 2015)

Ⅲ.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가. 성별 구분 조항

- 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여성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나. 구분 개선 필요성

- 상훈법시행령 제정 당시 남·여의 체구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용과 여성용 훈장의 크기를 달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여성의 체구 등 상황변화에 따라 남·여 차별로 오인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2. 성별 균형 참여

가. 성별 균형 참여 관련 조항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구분 개선 필요성

-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하되,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상훈법 시행령(행정자치부, 2015)

□ 〈해당 조항 개선안〉

현 행	개 선 안
<p>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u>다만, 여성용 훈장으로서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大綬)로 된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3과 같다.</u></p> <p>②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13조(제식 및 규격) ①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훈장 및 포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u>〈삭제〉</u> * <u>별표 3도 함께 삭제</u></p> <p>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u>이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u> 다만, 국가안전보장,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위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4.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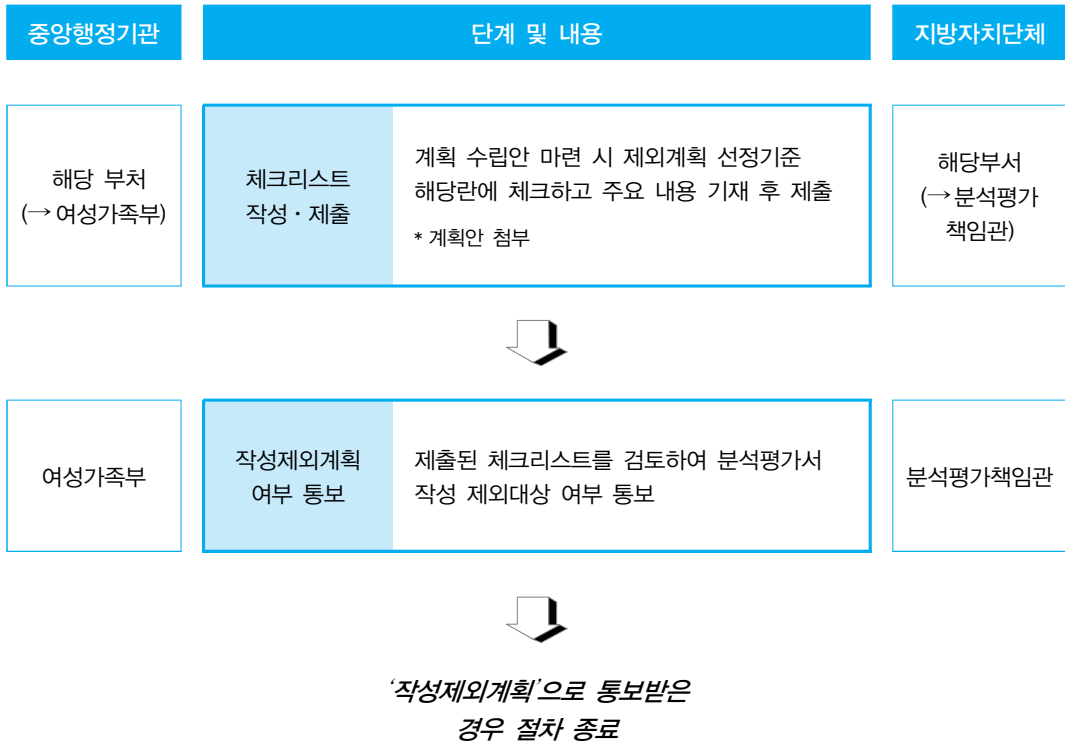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
 - 각 기관은 해당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영 제4조)
 - * 「V. 참고자료」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중장기계획 목록’ 첨부
 - * ○○기본계획, ○○종합계획, ○○5개년 계획 등으로 명칭하는 계획에 대해 작성
-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중앙행정기관 대상, p. 118 참조)

나. 분석평가 시기 및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분석평가 시기
 - 신규 수립인 경우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재수립인 경우 재수립 시작 단계 2개월 전 전년도 계획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 계획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계획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계획’ 참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 · 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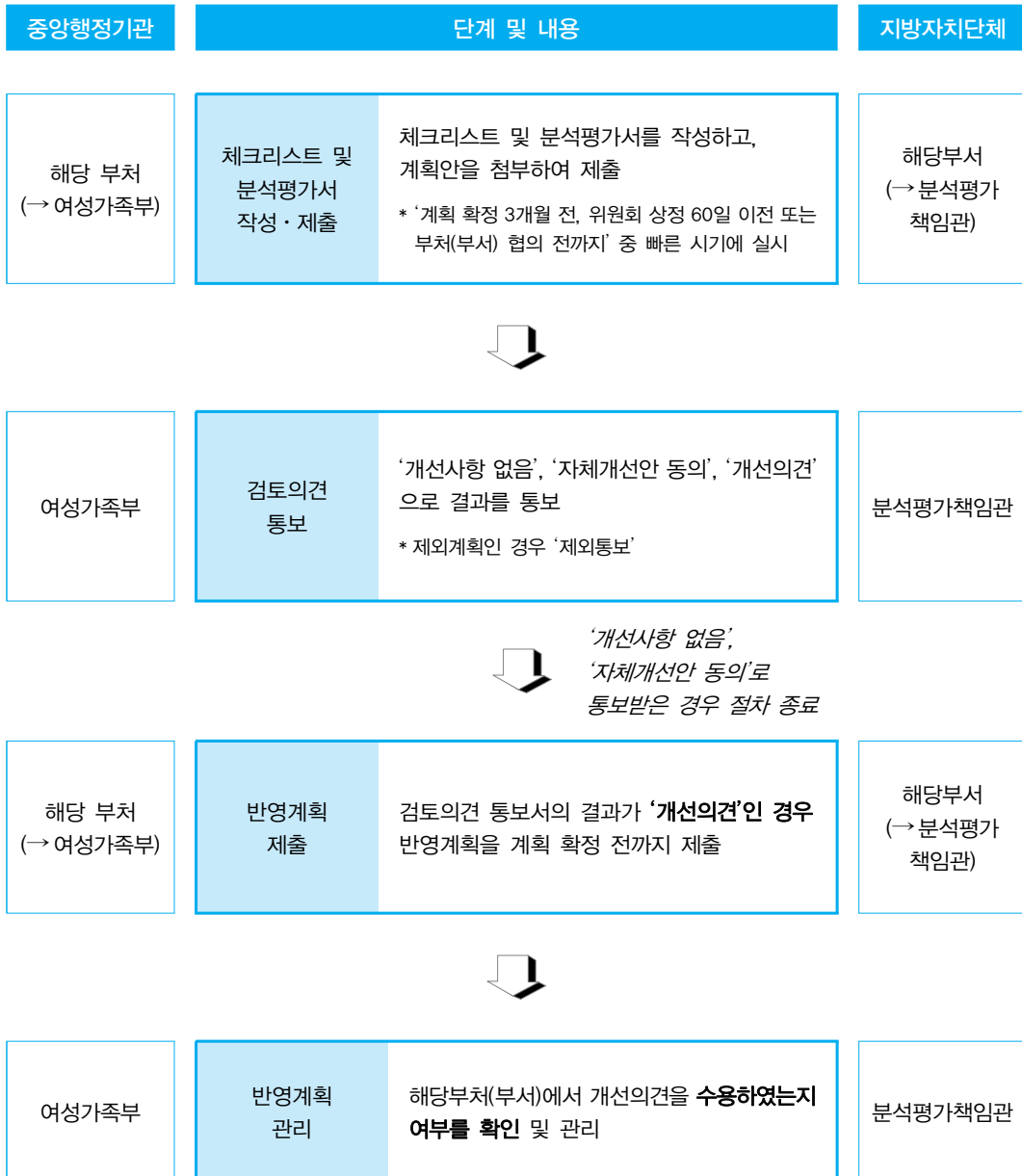
- 계획안 마련 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2) 제외계획 여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계획안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계획인지 여부를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체크리스트에 대해 ‘제외계획 통보,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구분하여 통보
 - **(제외계획 통보)** 해당 계획안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에 해당함을 확인·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 제외계획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계획’ 참조
-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계획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계획 확정 3개월 전, 위원회 상정 60일 이전 또는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2)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 필요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 분석평가서 작성이 필요없는 ‘제외계획’이면 제외 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계획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 * 검토의견 통보 기간 연장 사유 : 계획안의 지연 제출, 제출 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해당 계획 확정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4) 반영계획 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 제출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고,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계획을 지속 관리

다.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의 선정

(1) 선정 기준

-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분석평가 대상이 되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은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제외 계획 및 대상계획 예시	
작성 제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2) 선정방식 및 절차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체크리스트만 제출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체크리스트와 계획안을 검토하여 ‘제외계획’ 여부를 확인 통보
- ‘제외통보’를 받은 경우 분석평가 절차를 종료하고,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 수립하는 계획이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기재
 - 제외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대상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없이 체크리스트만 제출
 - 제외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아니오'로 체크하며, 분석평가서 작성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차 (년 ~ 년)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관계기관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기관명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일간)			
	계획안 마련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간)			
붙임 자료	계획(안) 및 요약본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기본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년 월 일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 지표

- 계획의 분석평가 지표는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 5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II. 전략 및 중점과제	3. 성별 형평성	③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 (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 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음)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 개선 및 환류)	④ 법령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 과제 등을 의미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I. 개 요

■ 비전과 목표

○ 해당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 전략 및 중점과제

○ 해당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II. 비전과 목표

※ 계획 수립 시 비전과 목표가 ①제1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②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한 다음 '비전과 목표'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계획에 반영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하단 점검포인트 상 해당사항 있을 시 성별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임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해당 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분석 근거>

○

Ⅲ.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으며,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 계획이 의도적으로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계획과 관련하여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사회문화적 차이':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경제적 차이':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신체적 차이':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1 성별 요구도 ※ 해당 항목에만 작성하거나 통합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2 성별 형평성

2.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계획 수립 시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계획을 도출

- 수혜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이 50:50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발생을 의미

- 관련 통계 : _____ * (계획 관련 통계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명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명(%)

* 통계출처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수정하거나 관련 법령, 사업 등에 반영한 내용을 기재

IV.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II. 비전과 목표, III.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 법령 반영 계획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법령명과 법령의 개선 계획을 기재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II. 비전과 목표, III. 전략 및 중점과제의 세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
- ※ 사업 또는 과제 반영 계획인 경우 해당 사업 또는 과제명과 개선 계획을 기재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이메일			

(3)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제1차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계획(경찰청, 2014~2018)

(경찰청)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계획명 : 제1차 경찰공무원 보건의안 및 복지 기본계획

I. 개 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자랑스러운 경찰, 행복한 가정, 안전한 국민
- 목표 : 경찰공무원의 자존감 제고와 삶의 질 향상으로 경찰의 사기 진작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증진한다.

□ 전략 및 중점과제

대과제	중과제	세 부 과 제
직업 복지	보수·수당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수당체계 합리화
	안정적 주거마련	주거마련 지원제도 설계 경찰관사 개선 및 신축
	쾌적하고 합리적인 근무환경 마련	근무시간 및 근무지 이동기준 합리화 지구대·파출소 단계적 현대화 여경 편의시설 설치
	순직·공상 예우 및 지원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건강 복지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관리 기반조성 건강관리 체계구축
	치유중심 정신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다양화 및 운영확대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용가능 진료체계	경찰병원 특성화 지역병원과 협약 체결
가족 복지	경찰가족의 안녕과 복지	가족관계 개선 지원 일·가족 양립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영·유아 육아지원
		초·중·고 자녀 교육지원
		대학생 자녀 교육지원
문화·여가 복지	수준높은 문화복지	문화·예술 체험지원 문화·체육 활동지원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복지	휴양시설 확충 및 개선
		휴양시설 제휴 확대

II. 비전과 목표

①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계획은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 해당계획은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경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관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중립적인 목표를 수립함. 다만, 근무여건 및 시설의 경우 성별에 따른 필요성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과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III.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들 중에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 및 중점과제가 있다면,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계획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계획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전략 및 중점과제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계획에 포함된 전략 및 중점과제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1 성별 요구도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일·가정의 양립 문제가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자녀 돌봄은 여성만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13년 복지현황조사에 의하면 여경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경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배려'를 1순위(48.7%)로 응답한 반면, 남경은 3순위(26.4%)에 그침. 또한 원하는 보육지원 형태의 경우, 여경은 직장 보육시설(52.6%), 보육비 지원(39.8%)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보육비 지원(67.6%), 직장보육시설(22.6%) 순으로 응답하여 상호간 요구차이가 존재. 따라서 '일·가족 양립지원' 및 '영유아 육아지원' 과제 추진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13년 복지현황조사에 의하면 여경을 위한 적합한 시설 및 여건 보유정도에 대하여 여경의 34.9%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남경은 28.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여경편의시설 설치' 과제 추진시 이러한 요구차이 반영 필요
- 2-1. 예방중심 건강복지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상 건강검진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된 바, 동 법령에 기반한 추진과제 마련이 필요
 -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한 질병발생률**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구축 명시 필요
 - * 직장여성의 임신 기간 동안 근로환경은 미숙아 및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성이 높으므로(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미숙아 등 출산비율 : 12.2% vs 근로환경이 좋은 경우 2.7%), 미숙아 및 저체중아 관련 산전·산후 건강검진 필요
 - ** 여성경찰관의 우울증은 남성 경찰관의 두배에 달함(여성경찰관 18.1% vs 남성경찰관 7.6%)
 - 일본의 PTSD의 고위험군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0~20%p 높다는 결과(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 비율 비교, 연세대 2013)

2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주로 경찰공무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인프라 개선과 관련되어 있어서 수혜의 형평성과 무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여경은 '13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인원 102,713명 중 7,817명(7.6%)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그에 따라 지금까지의 남성위주 시설물 설치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시설설치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

□ 〈해당계획 개선안〉

- 여경은 물론, 남경의 육아휴직 확대와 영유아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여타 기관과의 보육서비스 공유 사업과 관련된 과제 보완
- 건강·질병연구 수행시 '성별' 고려 규정 명시

현 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경찰 직무특성에 맞는 독자적 건강검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을 채용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등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경찰 직무특성에 맞는 독자적 건강검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을 채용시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배치 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수시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등으로 구분 -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한 질병발생률 등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건강검진 : 경찰공무원 채용시 일정 자격 확인을 위한 검사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 배치 전 건강검진 : 첫 배치시 신체·정신의 건강상태 적합 여부 판단 ▶ 특수건강검진 : 업무분석을 통해 유해인자 및 질병별로 건강진단 ▶ 수시건강검진 : 직업성 질환을 감시하기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건강검진 : 같은 부서 등에 유사한 질병의 자각 증상이 발생시, 집단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건강검진 : 경찰공무원 채용시 일정 자격 확인을 위한 검사 ▶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 배치 전 건강검진 : 첫 배치시 신체·정신의 건강상태 적합 여부 판단 ▶ 특수건강검진 : 업무분석을 통해 유해인자 및 질병별로 건강진단(여경의 모성보호 관련 검사 포함) ▶ 수시건강검진 : 직업성 질환을 감시하기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임시건강검진 : 같은 부서 등에 유사한 질병의 자각 증상이 발생시, 집단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구축 계획 명시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분석평가 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없음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일가족 양립 지원 사업을 위한 과제설정 및 영·유아 육아지원, 여경 편의시설 설치에 예산 편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3~2017)

I. 개 요

■ 비전과 목표

- 비전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 전략 및 중점과제

추진 영역	중점 과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II. 비전과 목표

①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type="checkbox"/> 해당계획은 인적대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계획은 시설설치·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계획은 기타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성별영향 발생가능성이 있는가?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분석 근거>

- 본 계획은 청소년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하며,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중립적인 목표를 수립함. 다만, 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안전에 대한 위험도 등 생활환경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과제에 반영할 필요

III. 전략 및 중점과제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2.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① 성별 요구도

2-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크게 느끼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이 성별로 상이함(자료 : 통계청, 2008 사회조사). 따라서 가출, 학교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점과제 추진 시, 여자청소년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등 보완 필요

〈성별·연령대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단위 : %)

구 분		불 안	보 통	안 전
여성	10대 이하	60.8	28.4	10.7
	20대	59.5	29.6	10.8
	30대	56.1	30.8	13.0
	40대	48.1	32.8	19.1
	50대	43.2	32.1	24.6
	60대 이상	34.2	30.3	35.6
남성	10대 이하	31.3	34.1	34.7
	20대	24.2	39.8	36.0
	30대	33.8	40.7	25.4
	40대	33.6	36.2	30.2
	50대	30.3	35.0	34.7
	60대 이상	27.7	30.6	41.6

-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여자청소년(43.5%)이 남자청소년(27.6%)에 비해 외모에 대한 고민 비중이 높으므로(통계청, 2010 사회조사),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필요

2-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여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및 지원 확대 필요

2-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위기 청소년 중 여자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학습권을 박탈당하기 쉽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미혼모의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임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석 및 휴학인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0 사회조사), 우울증상 경험률(여성 19.1%, 남성 7.9%) 및 자살 생각률(여성 21.7%, 남성 8.5%)도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성별로 상이하므로(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중점과제 추진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② 성별 형평성

3.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관련통계 : 청소년(9~24세) 현황*

	2011년		2012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10,359,681명	10,359,681명	10,197,036명	10,197,036명
여성(비율)	4,894,924명(47.2%)	4,894,924명(47.2%)	4,817,063명(47.2%)	4,817,063명(47.2%)
남성(비율)	5,464,757명(52.8%)	5,464,757명(52.8%)	5,379,973명(52.8%)	5,379,973명(52.8%)

* 통계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계획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자 및 수혜자의 경우 여성 47.2%, 남성 52.8%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계획수립 필요

■ 반영완료 사항

- 청소년들의 인성 교육 강화 중점과제에 외모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 내용 추가하여 반영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관한 중점과제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반영 완료

③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분석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4. 법령 반영 계획	-
5.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중점과제 관련 여자청소년에 대한 안전 지원 확대 내용 반영 계획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중점과제 관련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지원 확대 방안 반영 계획 •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중점과제 관련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출석 및 휴학인정 등 제도적 방안 반영 계획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예산서 작성 전에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 중앙 : 4월말까지, 지자체 : 8월말까지(*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분석평가의 취지를 살려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상 사업 선정 시 제외하고, 수혜 격차가 커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선 선정 필요

*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중앙행정기관】**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17년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최소 '16년 과제수 이상으로 하되, 가급적 신규과제 30% 이상 발굴)
 - * 20개 이상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 실시한 기관은 적용 제외
 - 국정과제 중 '17년도 신규사업과 성인지예산 사업 중 지속적으로 성과목표 미달성한 사업*(단, 양성평등기본계획 사업 제외)은 반드시 선정
 - * 여성가족부에서 추후 통보 예정, 단위사업으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세부사업으로 작성 가능(단, 사업명은 단위사업명 기재)
- **【지방자치단체】** '18년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하거나, '17년 예산서 중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선정
 - '17년 과제 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

○ 대상사업 선정에 위한 점검 포인트

- 각 부처 실무담당자*가 대상사업 선정 시 아래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을 위주로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16.12.20. 공포, '17.6.21. 시행) 제14조

선정 기준	해당 여부
▶ 수혜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정책(사업)의 대상집단을 성별로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정책(사업) 수혜 정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 <input type="checkbox"/>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가? - 고용, 복지, 안전, 시설설치, 개선 사업 * 예술·문화활동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사업, 혁신도시 및 뉴타운 건설사업, 신도시조성사업,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빈곤층 자원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혜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 정책(사업) <input type="checkbox"/>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 반영(법 제9조 및 영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예) 2017년에 분석평가를 실시한 예산 사업 : 2018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2017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2018년 2월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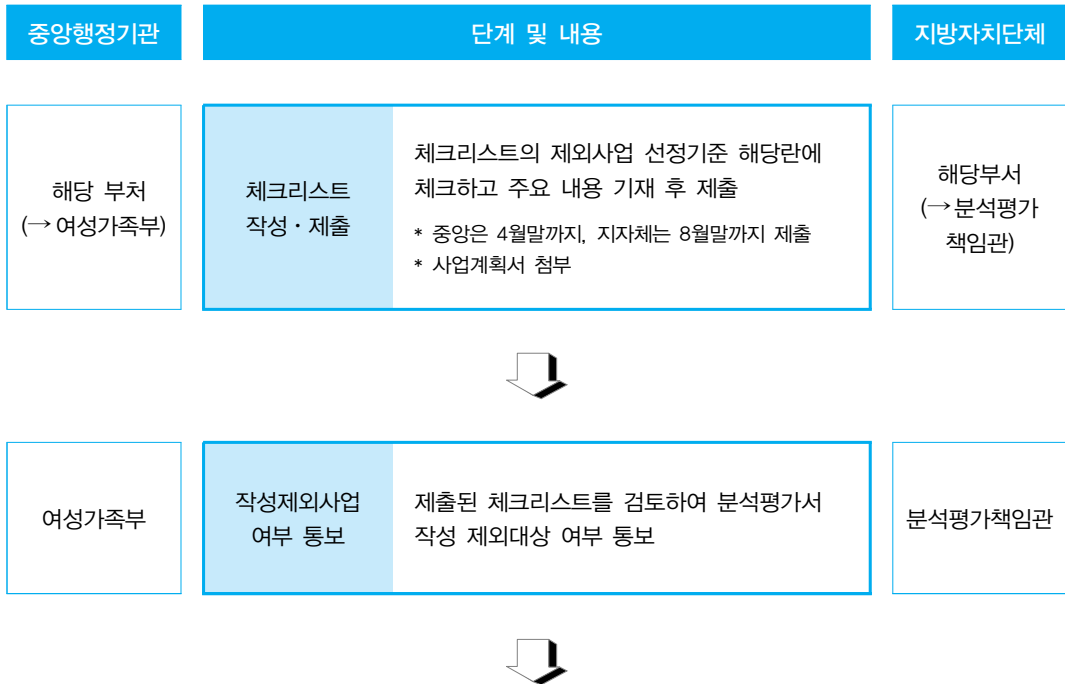
라. 추진 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에 따라 절차 구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체크리스트만 작성·제출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사업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작성·제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작성제외사업’으로 통보받은 경우 절차 종료

-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는 검토 후 해당기관(부서)에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사업’ 참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체크리스트만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4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8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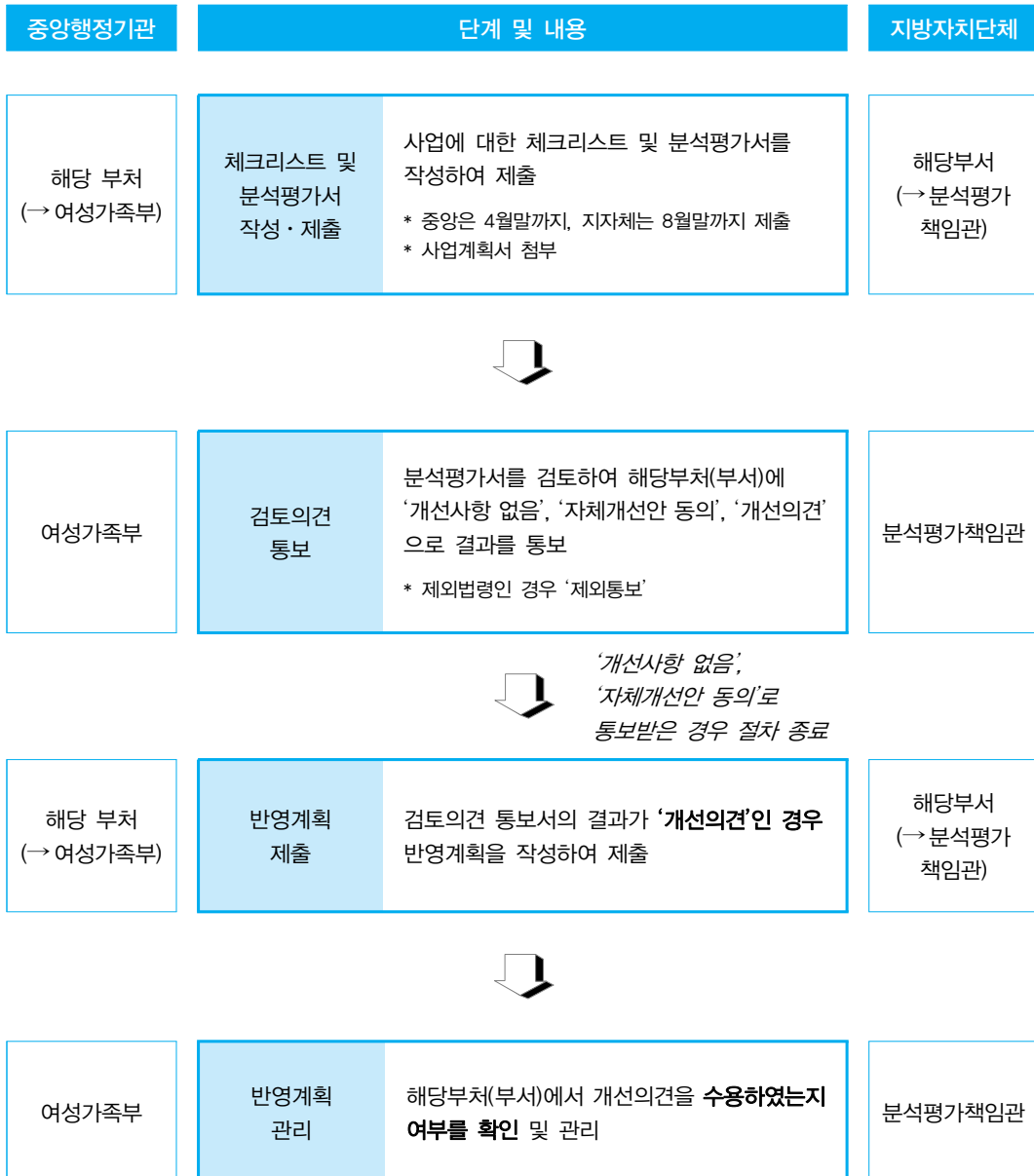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2) 제외사업 여부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해당 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사업인지 여부를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검토결과에 따라 ‘제외사업 통보, 분석평가서 제출 요청’으로 구분하여 통보
 - (작성제외사업 통보) 해당 사업이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함을 확인·통보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 작성제외사업이 아닌 경우, 성평등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
 - 해당기관 분석평가서 작성 요청을 받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 이후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 사업’ 참조
-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검토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토기간 연장 가능(이 경우 최대한 신속히 검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여성가족부) 분석평가 각 단계에서 컨설팅·교육 지원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1)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4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8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
 - * 분석평가서 작성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 필요
 - *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2) 검토의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출된 분석평가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처/부서에 통보
 - *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개선사항 없음)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개선의견 없음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자체개선안 동의)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 분석평가 절차 종료
 - (개선의견) 성평등을 위해 사업의 내용, 수행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3) 반영계획 제출

- 검토의견 통보서의 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제출
-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통보

(4) 반영계획 관리

-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반영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개선의견 수용·불수용·일부수용·중단’으로 표시
 - ‘수용’이나 ‘일부수용’으로 확인한 경우 반영계획서에서 해당기관/부서가 수용한 개선항목 수 및 항목을 선택하여야 함
 -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입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을 작성하여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사업 지속 관리

마.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1) 체크리스트 작성

(1) 작성 기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적용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작성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각 기관은 분석평가 사업대상 선정 등을 위한 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시 관계 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의 참여 필요

(2) 작성방식 및 절차

-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 체크리스트의 정책분야에 정부 BRM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분야 체크

(3)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비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단위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단위사업인 경우 단위사업명만 작성		
	<input type="checkbox"/> 세부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세부사업인 경우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모두 작성		
	<input type="checkbox"/> 내역사업		* 분석평가 대상이 내역사업인 경우 단위, 세부, 내역사업명 모두 작성 * 내역사업으로 대상 선정은 중앙행정기관만 해당 (지자체는 세부사업까지만 선택가능)		
구분1	신규사업 () 계속사업 ()				
구분2	분석평가서 작성 신규 과제 ()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 () * 2012년 이후 1회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경우 '기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에 해당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사무 구분 * 지자체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가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고유사무 <input type="checkbox"/> 시·도 위임사무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고유사무				
정책 분야	<input type="checkbox"/> 공공질서 및 안전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통 및 물류 <input type="checkbox"/> 농림 <input type="checkbox"/> 문화체육관광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산업·통상·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공공행정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 <input type="checkbox"/> 통일·외교 <input type="checkbox"/> 해양수산 <input type="checkbox"/> 환경 * 중복선택 불가. 선택분야에 따라 GIA시스템 상 분석평가서 작성시 맞춤형 점검포인트 제시				
선정근거 * 중앙행정 기관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대통령지시사항 * 4개 항목 중 해당사항을 모두 선택 * 성인지예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사항 선택		<input type="checkbox"/> 성인지예산사업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 미달성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타	
추진근거	*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 규정, 지침 등 기재				

선정 기준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추진하는 사업이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로 체크하며, 선정 기준에 해당 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 작성

년 월 일

2) 분석평가서 작성

(1) 분석평가 지표

- 사업의 분석평가 지표는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한 6개의 분석평가 항목으로 구성
- 체크리스트에 기재한 해당 정책분야에 따라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점검포인트 제시

분석평가 항목			점검 point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히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 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 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4. 예산	⑤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사업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

(2)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작성 요령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에서 작성 시 분석평가 항목에 대해 분야별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 포인트가 제시됨 → 점검 포인트를 참조하여 분석평가서 작성

○ 사업명 :

I. 개 요

■ 사업 목적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추진 근거

○

■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근거	예산		
		2016년(A)	2017년(B)	증감(B-A)
	<input type="checkbox"/> 회계* (국비 __%, 지방비 __%)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있음: 남성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 없음: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 '사회문화적 차이':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남녀의 인식 및 경험 등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향이 있음
- * '경제적 차이': 남녀의 경제적 위치(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에 따라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여성은 남성보다 저임금, 비정규직 등에 몰리는 경향이 있으며 경력단절 문제 심각
- * '신체적 차이':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여부
(예시) 성별에 따라 평균수명 또는 특정질병에 대한 발병·유병률이 상이해 보건·안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 해당없음: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 **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50:50의 남녀 비율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자원배분을 의미
(예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공적연금 수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성별 요구도를 반영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1 성별 요구도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거나 통합하여 작성 가능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② 사업의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_____ *

	2015년			2016년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사업대상자 (A)	사업수혜자 (B)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전체	명	명	%	명	명	%
여성(비율)	명(%)	명(%)	%	명(%)	명(%)	%
남성(비율)	명(%)	명(%)	%	명(%)	명(%)	%

* 통계출처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별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5년	2016년
전체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반영 또는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년 월 일

■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 급	
	전화번호			
	이메일			

(3)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예시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사업명 : 농업인대학 운영

I. 개 요

■ 사업 목적

○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업 현장의 기술 애로 해결 및 전문 농업인력 양성

■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별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학당 1~3개 과정을 개설하며, 6~12개월, 100시간 이상의 중장기 심화교육으로 운영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5년(A)	2016년(B)	증감(B-A)
농업인대학 운영	2,173	2,000	△173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①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②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영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있음: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정책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면 '있음'에 체크

※ 해당사업이 성차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님

* 없음: 사업 관련해서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으면 '없음'에 체크

** 반영완료: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이미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면 '반영완료'에 체크

** 추후개선: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요구를 고려하여 사업에 수용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면 '추후개선'에 체크

** 해당없음: 사업과 관련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없어, 성별에 따라 다른 정책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

① 성별 요구도

1-1.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type="checkbox"/>	농림부문에 대한 인식 및 경험(농림업 종사자 등록, 경영주 여부 등)에 따른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교육 수준의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농촌의 문화로 인해 남성과 여성이 농가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 사업에서 농림업 관련한 정보 활용(전자상거래를 통한 농림산물 판매, 농림업 관련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분석 근거〉

- 농촌문화, 노동집약적인 농사일과 가사일의 병행, 농기계 조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 비중이 크다는 인식 등으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도 차이 발생
-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 개설 및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교육형태 다양화 필요

1-2.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해당 사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형태(자기 농림업, 남의 농림업, 자기농림업과 남의 농림업 동시 종사 등)의 성별 차이가 있는가?
- ☒ 해당 사업에서 경지(논, 밭, 개간지, 하천부지, 간척지 등) 소유여부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 농가 소득수준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차이가 있는가?
- ☐ 해당 사업에서 농림부문에 종사하는 형태(농림업 전업, 겸업 등)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 영농형태(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에서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차이가 있는가?
- ☐ 해당 사업에서 농산물의 판매장소나 판매처(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농협, 수집상, 직접판매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 해당 사업에서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도구(농기계와 저온 저장고, 정보화 기기, 교통수단 등)를 보유하는 데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분석 근거〉

- 대부분 농가경영주(사업주)는 남성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교통수단이 남성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농가 경영주의 동업자 교육 독려 및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한 교육 형태 다양화 필요

1-3. 남녀의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해당 사업에 대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가 있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영농형태(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는가?
- ☒ 농림기구 이용 시 만족도, 편의성, 안전성, 교통 접근성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 해당 사업에서 연령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가?

■ 〈분석 근거〉

- 여성은 농기계 사용 및 조작에 대한 숙련도 차이 및 신체적 차이로 인해 주로 소형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이 많고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경우 (축산 등) 여성농업인의 참여 저조
- 식품발효, 생활원예, 전통식품, 농산물가공, 발효식품 등 여성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필요

② 사업의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 해당 사업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대상자(모집단) 대비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분석하여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대상자의 성별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 대상자의 성비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input type="checkbox"/>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성비를 비교하였을 때,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려되었는가?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농업 종사자*

	2014년		2015년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전체	2,599,176명	12,257명	2,599,176명	13,000명
여성(비율)	1,338,352명(51.5%)	4,355(35.5%)	1,338,352명(51.5%)	4,810명(37.0%)
남성(비율)	1,260,824명(48.5%)	7,902(64.5%)	1,260,824명(48.5%)	8,190명(63.0%)

* 통계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농가/성별 농가인구)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전체 사업 수혜자 비율에 있어서 여성(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형태 마련

■ 반영완료 사항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식품발효, 생활원예, 원예치료, 전통식품, 농산물 가공, 발효식품 등) 확대·개설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을 기입하고, 집행예산을 수혜자 성별 비중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 대상자의 성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의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점검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
- ☒ 사업수혜자의 성별 비율로 예산을 배분한 결과, 추후 예산 배분의 조정이 필요한가?
- ☐ 비예산 사업인 경우, 실질적 예산배분이 필요한가?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2014년	2015년
전체	2,050백만원	2,180백만원
여성(비율)	726백만원(35.4%)	807백만원(37.0%)
남성(비율)	1,324백만원(64.6%)	1,373백만원(63.0%)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본 사업은 성별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인대학 과정을 개설할 경우 사업수혜와 같이 예산수혜에서도 여성의 비율(37.0%)이 남성(63.0%)보다 낮게 나타나므로,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에 우선적 예산배분 필요

■ 반영완료 사항

- 품목별 성별 수혜비율 집계 및 여성비율 쿼터제(20% 이상) 권고·실시함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분석평가결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 분석평가결과, 성별차이 분석을 위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 분석평가결과,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여성 비율, 참여 조건)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 분석평가결과,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컨설팅팀 및 컨설팅 인증위원회 구성)를 보장하는 내용을 지침 등에 포함해야 하는가?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별 교육 수혜율 집계를 규정할 계획
-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성(性)이 교육 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

5. 예산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분석평가결과,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 ☐ 분석평가결과, 남성과 여성의 농가경영에 대한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 농업인 대학 평가 시 여성의 교육 참여비율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예산 차등화 할 계획
-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예정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검포인트

-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생산·활용되고 있는가?
- ☐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
- ☐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 ☒ 여성농업인의 해당사업 참여를 위한 물리적 조건(컨설팅 시간, 장소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 ☐ 해당 사업의 홍보자료를 접하는 데 남성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정보접근 방식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가?
- ☐ 컨설팅팀이 농가경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는가?
- ☐ 컨설팅팀 및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교육참여를 위해 부부교육, 야간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실시 예정

바.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안내

1) 추진 배경

□ 취 지

- 정부는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 법질서관계장관회의(‘16.6.1.), 사회관계장관회의(‘16.6.22.)
- 여성·아동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협조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시설·공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가이드 라인을 참조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평가 추진
 - * 시설·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을 차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에 반영

2) 필요성

□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성별 차이

-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y)란 지역 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별, 연령, 소득 등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내의 환경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음¹⁾

1) (Dame, T. and Grant, S., 2002; 장미혜 외, 2013 재인용)

○ 여성들은 남성보다 도시공간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²⁾

* 야간 보행 시 두려운 장소가 있다는 남성은 29.1%에 그치지만, 여성은 절반 이상인 55.5%로 격차를 보이며, 범죄위험의 경우 불안(비교적 불안, 매우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남성은 58.4%, 여성은 70.5%로 남성보다 여성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범죄위험, 13세 이상 인구,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 도시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성의 공간 이용 방식(이용 장소, 이용 시간, 이동 수단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공간이용의 많은 부분에 제약으로 작용함. 결국, 안전성이 취약한 공간은 여성들에게 불공평한 공간이 됨³⁾

*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 중 ‘그냥 다닌다’는 비율은 남성 65.2%, 여성은 43.7%임. 이 외에 여성이 많이 나타내는 특성은 ‘낮이나 다음 기회로 미룬다’, ‘피해 다닌다’, ‘차를 탄다’, ‘아는 사람과 동행한다’ 순으로 모두 남성보다 높은 비율임. 여성들은 대부분 야간에 불안한 장소를 ‘회피’하는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음.(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대처방법,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 따라서, 안전성의 확보는 여성들의 평등한 공간이용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임

□ 여성의 돌봄 역할과 시설·공간 이용의 어려움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동,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아 시설·공간에 대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함

- 유모차에 아이를 태워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여 건물 목을 건너는 등, 여성은 돌봄대상자가 지닌 보행약자⁴⁾의 이동 특성을 공유하게 됨
- 따라서 여성의 돌봄 활동으로 인한 공간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함

2) (남수현 외, 2014)

3) (장미현, 2016)

4) 일반적으로 보행약자에는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통행특성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 목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및 무거운 짐을 든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기 사용자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강현미 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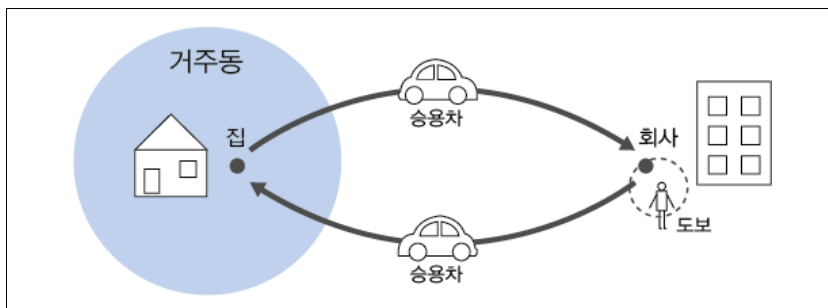
- 또한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하고 아동, 고령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공간이용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 대상자를 동반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

(예)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설치 등

□ 이동 패턴의 성별 차이

- 공간 이동과 관련하여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 남성의 이동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많고, 승용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취업 여성의 이동은 원거리 직장의 경우 버스로 이동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가사 및 돌봄 관련 일을 하는 경향을 나타냄.⁵⁾ 전업 주부의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이 많고 보행, 마을버스와 버스의 이용률이 높으며, 가사와 돌봄을 위한 단편적 이동이 비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님⁶⁾ [그림 1~3]
- 따라서, 마을이나 골목길 등의 안전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시, 대중교통 정거장에서 주거지에 이르는 주 보행로 등 여성들의 주요 이동 공간을 고려하여 분석평가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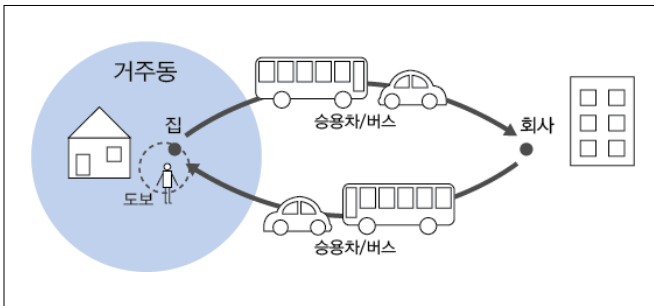
[그림 1] 취업남성의 이동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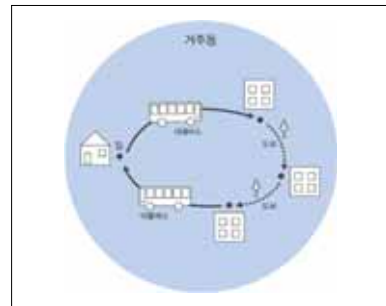
5) (최유진 외, 2013)

6) (손문금 외, 2013; 최유진 외, 2013)

[그림 2] 취업여성의 이동 패턴



[그림 3] 전업주부의 이동 패턴



출처 : 최유진 외(2013)

□ 재난 대처 능력에서의 성별 차이

-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성별차이가 가장 뚜렷한 영역은 재난대처능력 영역임. 이는 재난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접근성 차이,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차이 등에 기인함⁷⁾
- 따라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보 전달, 대피 위치 및 방법 홍보 등이 여성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분석평가를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공간조성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 지역 주민들의 안전 관련 성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도시설계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공간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위원회의 성별 고른 참여, 성인지 전문가의 활용 필요
-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 방안의 모색 필요
(예) 모니터링, 설문조사, 간담회 등

7) (강희영 외, 2015)

3)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포인트

(1)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의 유형

- 시설·공간 사업에서 다루어지는 안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공간이용 안전, 범죄안전, 재난안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간이용안전은 다양한 이용자들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 (안전한 재료, 경사, 유효폭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무장애공간설계(BF)*의 적용, 아동,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가 포함됨

* 무장애공간설계(BF :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의미함. 지역 환경이나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개별시설이 대상이 됨.⁸⁾ 도시 및 건축공간을 이용하는데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의 계획단계부터 장애물을 만들지 않거나 기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적용함

- 범죄안전은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적용, 방법 시설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또는 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낮추고 나아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됨.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원리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시, 접근 통제, 공동체 강화를 기본원리로 하여,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증대(activity support), 명료성 강화(legibility),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의 6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됨(김재민 외, 2012)

- 재난안전은 하천 정비,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등 주로 재해재난대비를 목적으로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

(2)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 분석평가 시 주요 점검할 사항

① 공간이용 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공간이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각종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적용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심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의 정비 및 유지 관리 필요 • 자전거도로 확충 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도로와 차도를 분리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 시설물이 자전거 도로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함 -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보행자와 자전거의 동선의 중첩 방지,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방지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경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⁹⁾대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 안전펜스, 교통안전표지판, 차량 과속방지턱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역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

9)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민안전처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 9.)에 따라 설치됨. 이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 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 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기준과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범죄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범죄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보안등 설치/유지관리 • 조도 개선 사업 • CCTV 및 비상벨 설치 •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아동, 여성) • 안심귀가길사업 • 안전지도제작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안전 모니터링/어린이안전지킴이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가로등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상지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요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여성들의 야간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야간보행 시 안전체감도가 낮은 공간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인적이 드물거나 외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함 •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는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있다는 점, 조명의 설치는 에너지 절약 및 빛 공해로 인한 수면 방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 안전과 상충되는 가치와 충돌을 조율할 수 있는 개선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장소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정보 안내, 조명의 빛 방향이 주택 쪽으로 향하지 않고 주거지 내 골목길 안쪽에만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컷오프형(Cut off) LED등으로 설치 등 • 안전지도 제작사업의 경우 범죄안전뿐만 아니라 공간 안전, 재난안전(우리동네 대피소, 대피동선, 재해시 위험지역 등)을 포함하여 실시 가능 •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안심귀가길 사업 중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대나 안심귀가 도우미 등의 활동에 지역여성들의 참여 확대, 참여 도우미 활동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시 안전지킴이의 성범죄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성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조례 등) 개정 추진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같이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시설물 설치 사업의 경우에도 안전을 고려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판의 가시성을 높임

③ 공간이용안전과 범죄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공간이용 안전 + 범죄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설치/확충/개선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 공공청사,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리모델링 다중이용시설 설치/개선/관리 아동시설 설치/기능보강 장애인시설운영 공공건축물 신축/관리 생활권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조성, 도시공원조성, 공원 녹지조성, 공원정비 등산로 정비, 산림휴양시설관리 가로수 관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시장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유개승강장 확충/설치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유지보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한 시설·공간의 설치 및 개선 시에는 종합적인 안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공간이용의 안전성과 범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 특정 공간이나 시설 중심의 물리적인 안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함. 주로 머무는 공간, 사용빈도가 높은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경로, 사용하고 이동하는 시간대 등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다른 도시 공간 이용패턴에 대한 고려가 중요 보행환경(골목길), 안전마을 등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장소, 이용이 많은 장소, 인적이 드문 장소 등과 지역 여성들의 추천장소를 대상지로 검토 실내 아동 놀이시설, 수영장 등의 돌봄을 위한 시설은 자칫 여성들의 이용이 더 많다는 이유로 여성편의시설 처럼 여겨지기도 함. 그러나 돌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영유아를 동반하여 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구체적인 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붙임] ‘시설별 분석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음

④ 재난안전이 주 내용인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안전분야	대상 사업 사례	점검 포인트
재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재해위험시설물관리 및 홍보 재해재난대비태세구축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하천관리, 하천환경정비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재난대처능력의 차이¹⁰⁾를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 대피 위치 및 방법 등 홍보 내용이 성별로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검토 실제 이용은 보행로나 산책로일지라도 공간계획 상 도로나 산책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 보행로나 산책로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0) 재난대처능력의 성별 차이는 재난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접근성 차이,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 차이 등에 기인함(강희영 외, 2015)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시 시설별 안전기준 관련 참고사항

-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 주요 시설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¹¹⁾ 지역별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활용

① 주차장

Tip

- 주차장은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공간이며 여성의 안전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가 중요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은 승용차의 승하차 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함. 법령에 명시된 기준은 없으나, 지역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배려주차장이나 교통약자 주차장 등에 대한 조례 및 기준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그림 참조]
- 배려주차장의 경우 보행약자의 특성을 지니는 대상자들의 이동 편의성, 이용률이 높은 여성의 안전체감도를 고려하여 출입구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설치
- 배려주차장은 여성들의 영유아 동반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여성우선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¹²⁾이라는 명칭 사용은 서서히 지양하는 추세임

[주차장 안전성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배려주차장	설치	배려주차장을 전체주차대수의 10~20% 이상 확보하고 확장형(2.5×5m)으로 설치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는 1대로 간주함. ¹³⁾ 10% 이상을 필수, 20% 이상을 권장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위치	주변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곳에 배려주차장 설치 권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의 30~50m 이내에 설치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함. 배려주차장은 건축법상 피난 거리 기준을 참조하여 30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11) 서울시, 인천 부평구, 익산시, 시흥시, 아산시 등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작성함

12) 여성전용 또는 여성우선주차장이라는 용어는 여성들이 주차를 못하거나 운전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음

13) 시흥시의 경우는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아산시의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 적용함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주차장 전반	주차장 내 보행 안전 통로 확보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출입문까지 0.9m 이상 유효폭 ¹⁴⁾ 으로 연속적으로 설치.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 ¹⁵⁾ 를 설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주차장 내 적정 조도	주차장으로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조도값이 실내 100lux 이상, 실외 30lux 이상이 되도록 함(실내 130lux 이상, 실외 60lux 이상은 권장사항임) ¹⁶⁾	KSA 3011 조도기준 ¹⁷⁾ [표5 교통]의 주차장 및 실내주차장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주차장 내 관찰 및 경보 시스템	배려주차구역의 모든 구간(주차구역의 모든 구간 권장)을 관찰할 수 있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폰 설치	모든 주차구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배려주차장은 CCTV, 비상벨, 인터폰이 필수적으로 설치하거나 권장 사항으로 제언, 시야의 사각지대에는 CCTV 설치 필요

[그림] 배려주차장 사례-시흥시



출처 : 남수현 외(2014)

14) 0.9m는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는 폭 0.875m에 근거함

15) 단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12. 경사로-나. 기울기 기준에 근거함

16)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17)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② 화장실

Tip

-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위치, 형태, 재료, 경보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을 검토
- 공중화장실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는 화장실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것이며, 남녀 화장실이 인접할 경우에는 출입구에서 시선이 마주하지 않도록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남자 화장실의 경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출입구에서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준도 검토 필요

[화장실 안전성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위치	공중화장실 위치	이용이 많고 접근이 편하며, 밝고 외지지 않은 곳에 설치. 화장실 주변을 주변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출입문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함. 남자화장실은 외부에서 소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등 설치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또는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고려 (예)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남성화장실 입구 안내 푼말 또는 가림막 설치)
재료	화장실 내 안전한 바닥재	미끄럼방지용 타일을 사용하여 마감. 전체 바닥면에 물기가 없도록 바닥면 배수시설 설치 ¹⁸⁾	
단위 부스 안전성	안전한 단위 부스 출입문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위 부스 출입문의 상하부에 적절한 틈새를 바닥으로부터 6~10cm 범위로 설치 ¹⁹⁾	
	안전한 단위 부스 잠금장치	모든 잠금장치가 고장이 없으며 외부로부터 쉽게 열 수 없도록 설치	단위 부스 안의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에서는 쉽게 개폐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²⁰⁾
범죄 안전	화장실 내 방법 및 경보장치	화장실 내 찾기 쉬운 장소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	비상벨의 경우 경보만 울리거나 외부로 경보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 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CCTV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할 수 있음	화장실 내 CCTV의 설치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설치를 지양함. 범죄 등의 방지 및 사후 대응을 고려하여 출입구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함
	화장실 적정 조도	실내의 조도는 100lux 이상으로 유지함. (150lux 이상 권장)	KSA 3011 조도기준 [표7 사무실] ²¹⁾ 의 서비스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③ 공원

Tip

- 공원은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과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음
- 공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산책로,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과 공원 전반의 범죄안전 관련 항목을 검토
- 산책로는 공원에 휴식이나 건강을 목적으로 (느린 속도로) 거닐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로로서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재질 및 마감, 기울기 등에 대해 검토
- 공원 전반의 안전성은 취약지역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 적용 필요 (CCTV 및 비상벨 설치, 시야의 확보, 조도의 확보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1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3.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 일반사항-(2)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19) 지자체의 여성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중 6~8cm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20) BF 인증은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비상시에 구출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문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장애인들이 내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BF 인증을 적용하는 시설일 경우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위부스 출입문 기준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음

21) KSA 조도기준 중 [표3 공공시설]의 서비스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의 기준은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사무실의 해당 공간 기준의 중간값과 최대값을 적용하였음

[공원 안전성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 (예시)	비 고
산책로	산책로 유효폭 ²²⁾	유효폭 1.5m 이상 필수. ²³⁾ 생활권 공원의 경우 유효폭 3.0m 이상, 주제 공원의 경우 유효폭 4.0m 이상 권장	최소 1.5m 이상의 유효폭 확보가 필요함.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의 권장 유효 폭은 아산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으로, 지역별 조건과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산책로의 재질 및 마감	산책로는 미끄러짐이 적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²⁴⁾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재 사용 권장	보도블럭 등의 이음면이 넓어질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의 이동, 하이힐을 신은 사람, 발이 작은 영유아의 보행 등에 불편함이 커짐
	산책로의 기울기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산책로는 1/18 이하로 설치함. 1/20 이하 권장 ²⁵⁾	
경사로	공원 내 경사로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 이하가 되도록 권장 ²⁶⁾	산책로가 아닌 일반 보행로에 경사로가 있을 경우 적용함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비상벨 및 CCTV 설치	공원 내 설치된 CCTV는 1개소 이상의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비추도록 할 것을 권장함
	시아 확보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 (은닉장소 제거), 수목의 하단부 전지 작업으로 가시권 확보	
	외부 조도	주요 보행로 및 시설의 가로등은 20m 이내 설치 또는 15~30lux 이상이 유지 되도록 함	가로등 설치 간격이나 조도 기준 중 적용가능한 기준을 활용하도록 함. 조도의 경우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시설의 공원과 주된 장소의 기준을 준용함 ²⁷⁾

22)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2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2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2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1/18의 기준을 적용하며, 산책로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기준 1/20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함

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2. 경사로-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함

27) 공원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도가 높은 장소이며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장소임. 이에 KSA 조도 기준 중 공원의 최대값(15lux)과 주된장소의 최대값(30lux)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④ 건축물

-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은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진입부터 내부시설까지 안전성 확보 필요

④-1. 건축물의 진입부

Tip

- 건축물의 진입부는 대지 내 보행로, 주차장,²⁸⁾ 주 출입구까지를 포함함
- 대지 내 보행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주 출입구까지, 주 출입구는 건물로 진입하는 출입문이 설치되는 공간임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진입부의 형태와 범죄로부터 안전성 확보방안을 검토

[건축물 진입부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 유효폭 ²⁹⁾	유효폭 1.5m~2.0m 이상 권장 ³⁰⁾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대지 경계선 내부 보행자로는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³¹⁾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피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턱 낮추기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보행로의 재질 및 마감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³²⁾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재 사용 권장	

28) 건축물 진입부의 주차장은 3-① 주차장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함.

29)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3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3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3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의 기울기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로는 1/18 이하로 설치. ³³⁾ 가능하면 평지 혹은 1/24 이하 권장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보행로 내 단차 및 장애물	보행로 내 단차는 2cm 이하, 가로수 가지 치기 높이, 가로등 및 간판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2.1m 이상 ³⁴⁾	보행로 내 가로수나 가로등, 볼라드, 맨홀, 점검구 등의 시설물로 인한 보행 장애가 없도록 유의
	보행로의 조도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40lux 이상, 60lux 이상 권장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시설]의 건물 외부 기준을 중간값과 최대값을 준용함
	보행로의 시야 확보	수목이나 시설물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불가피하게 시야가 차단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	
주 출입구	주 출입구 턱 낮추기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경사로 1/12 이하, 유효폭 1.2m 이상) 설치 ³⁵⁾	가능하면 단차없이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입문의 형태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유효폭 0.8m 이상의 한방향 개폐 여닫이 문을 설치. ³⁶⁾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 설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문의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회전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
	출입문 전후 활동공간	출입문 전후면에 활동공간을 0.8~1.0m 이상 확보 ³⁷⁾	유모차와 휠체어가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도록 출입문 전후에 활동공간을 확보

3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기울기 내용에 근거하여 1/18을 기준으로 함

3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마. 보행장애물 기준에 근거함

3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턱낮추기/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3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의 내용 중 출입구의 통과유효폭 0.8m 이상 기준에 근거함

3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는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 기준에서는 유효거리를 0.8~1.0m로 하여 전후면 모두 확보하도록 제시함

④-2. 건축물의 내부시설

Tip

- 복도, 계단과 난간, 승강기의 안전한 형태와 구조에 대한 기준, 위생시설,³⁸⁾ 건축물 내부 CCTV 및 비상벨 설치 기준 등의 검토

[건축물 내부시설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안내판	안내 정보의 제공	건물내부에 가독성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알아보기 쉽도록 비상대피로가 표시되어야 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하며, ³⁹⁾ 아동과 고령자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래픽으로 대피로가 표현되어야 함
복도	복도의 유효폭 ⁴⁰⁾	복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편복도 기준) 또는 1.8m 이상(중복도 기준) 확보 ⁴¹⁾	
	복도의 바닥마감	모든 통로의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이 평탄해야 하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 ⁴²⁾	바닥표면은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함
	복도의 조도	복도 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된 평균조도값이 100~150lux 이상 되도록 함	KSA 3011 조도기준 [표3 공공시설] 중 박물관, 극장, 영화관 등의 중간값과 최대값 기준을 준용함
계단과 난간	계단의 재료	주 계단의 디딤판 끝단을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 ⁴³⁾	계단의 디딤판은 발로 디디기 위한 수평면을 의미함. 가능하면 모든 계단의 끝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8) 위생시설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3-② 화장실의 가이드라인은 참조함

3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기준에 근거함

40)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4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가. 유효폭의 기준은 편복도 1.2m, 중복도 1.5m임. 이 중 중복도 기준을 조금 강화하여 제안함

4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4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마.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계단과 난간	계단의 난간	주 계단에 아동을 위한 하부손잡이를 높이 0.65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⁴⁴⁾	일반적인 계단 난간은 0.8~0.9m 높이에 설치됨. 아동이나 키가 작은 사람 등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함
승강기	승강기의 안전성	내부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부를 투명창으로 설치 ⁴⁵⁾ (출입문의 1/2 이상 권장)하고, 승강기 내부에 보안용 CCTV 설치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건축물 내부의 사각지대(피난계단, 부출입문) 등 곳곳에 방법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④-3. 건축물의 돌봄시설

Tip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실내 놀이시설이나 수유실 등 돌봄공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 실내 놀이시설의 안전성은 영유아들의 안전한 이용, 보호자들이 관찰 가능한 구조, 수유실의 안전성은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수유실 이용자의 위급상황 대비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

[건축물 돌봄시설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실내 놀이 시설	실내 놀이시설 출입문	개폐 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손끼임 안전장치를 설치	
	실내 놀이시설 바닥재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소재의 나무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절한 바닥재를 고려	
	실내 놀이시설의 보호자 관찰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4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다. 손잡이 기준 중 이중 난간 설치 시 하부 난간 기준을 적용함

4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9. 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 설비 기준에 의하면,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수유실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수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	수유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공간이 분리되도록 함
	수유실의 안전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벨을 설치,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를 설치할 수 있음	

⑤ 보행로

Tip

-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등 주요 보행공간의 경우 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임
- 보행로의 형태는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 유효폭,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보행공간의 기울기, 단차 및 보행 장애물 관련 기준 등을 검토
- 범죄안전에 대해서는 야간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야간 적정 조도, 조명 설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에 대한 기준을 검토
- 조명 설치, 조도 개선 등의 사업 시에 야간 조도의 확보가 필요한 보행로(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많은 시설 주변, 대중교통정거장 주변,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주 보행로, 횡단보도 주변 지역 등)를 조명 설치 및 개선 대상 지역에 포함

[보행로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보행로 형태	설치 유효폭 ⁴⁶⁾	주 보행공간은 유모차 및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1.5m 이상 필수, 2.0m 이상 권장 ⁴⁷⁾	

46) 교행을 위한 유효폭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사람(1,1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800mm
- 가방을 든 사람(8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500mm
- 유모차공간(575mm) + 가방을 들지 않은 사람(625mm) = 1,200mm

4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보행로 형태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보행공간은 연석·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의 차도가 분리되어야 하며, 공작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여야 함 ⁴⁸⁾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이음면은 2mm 이하로 설치 ⁴⁹⁾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재 사용 권장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아동,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보도의 틈새로 인해 보행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보행공간 기울기	보행로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함	
	단차 및 보행장애물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단차 제거. 경사면으로 단차를 제거한 부분의 폭은 90cm 이상, 기울기는 최소 1/12 이하로 할 것을 권장 ⁵⁰⁾	
범죄 안전	야간 적정조도 유지	주 보행로는 어둡지 않도록 야간 적정 조도 확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20~30lux 이상이 되도록 함 ⁵¹⁾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의 도로 수송 기관 중 도시 정류장 기준을 준용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도 기준의 적용에 융통성이 필요함.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 현재 지역에서 활용하는 조도를 고려하여 주 보행로의 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음
	조명 설치	차도와 보행로는 각각 조도를 확보하고,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도 조명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함	
	범죄예방 CCTV 설치	범죄우려지역, 대중교통 승강장 주변, 시야의 차단지역 및 외진 곳 등에 CCTV설치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심리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보행로가 개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시설물 및 조경은 시야확보에 용이하고 사각지대를 없앴	CPTED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방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함

4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4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5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51) 지역에 따라 조례나 도로 조명 기준에 차도와 보행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차도의 조도 기준을 동일하게

⑥ 버스승강장

Tip

- 버스 승강장 설치의 경우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범죄안전을 위해 시야 개방성과 조도 확보, 유개 승강장 설치 시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등을 검토
- 야간에 버스 승하차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강장에 자체 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 가로등을 활용하여 조도 확보 필요

[버스승강장에 대한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버스 정류장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수직가림막이 있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동 및 대기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	
	시야 개방성 확보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 시설물,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내외부로의 시야 확보를 위해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시각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짐. 시야의 차폐 요소를 지양하고, 버스 정류장과 주변이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버스 정류장의 조도 확보	버스정류장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 확보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차도의 기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로의 밝기로는 충분치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주 보행로의 경우 기존의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조도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거나, 차도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법 제5조제1항)
 - 정부홍보사업 내용의 성역할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 분석평가 추진

- * 정부홍보사업 분석평가 우수사례를 차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에 반영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 관련 공모사업 추진시 심사기준에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서식 상의 '점검포인트'를 반영하여 활용 권장
- * 연 2회 분석평가 추진결과 점검

나.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
 - 2017년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모든 경로를 통한 정부홍보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평가 실시

다. 분석평가 점검내용

- 등장인물의 구성
-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라.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는 정부홍보사업 분석평가서식을 배포하고,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분석평가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홍보사업에 대해 분석평가 실시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양성평등한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지침) 보급, 모니터링 추진, 분석평가결과 대외 공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 자문단(컨설턴트) 구성·운영, 종합평가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실시, 컨설팅 활용, 분석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마. 추진절차 : 모든 과정은 GIA시스템을 통해 진행

- 정부홍보사업 담당공무원이 GIA시스템(<http://gia.mogef.go.kr>)에서 분석평가 실시
- * 자세한 절차는 p.105 참조

바. 세부작성요령

- 정부홍보사업 분석평가는 점검포인트로 구성된 분석평가서 해당 항목 점검으로 종료
- 점검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요청하거나 자체개선 추진
 - GIA시스템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화면에서 ‘컨설팅 요청’을 클릭하면 컨설턴트에게 전달 → 컨설턴트가 확인 후 검토의견 통보 →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으로 컨설팅 결과 통보
- 컨설팅을 요청한 사업담당자가 컨설팅 결과에 대해 반영/미반영 여부 입력 후 종료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중앙행정기관	단계 및 내용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서 배포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식 배포 * 각부서, 소속기관에 분석평가서 배포(붙임 5-1, 5-4)	분석평가책임관
해당 부서 사업담당자	분석평가서 작성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작성 - 홍보물 시안 결정전에 GIA시스템을 통해 점검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사업담당자	자체개선 및 컨설팅 요청	개선사항이 없으면 분석평가 종료 개선사항이 있으면 '컨설팅 요청' 또는 '자체 개선' * 컨설팅은 자율적으로 요청하되 홍보물 시안 결정 전에 홍보물 시안을 첨부하여 GIA시스템을 통해 요청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가 컨설팅 실시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통보	컨설팅 결과 통보(7일 이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여성가족부 (→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컨설팅 결과 반영	검토의견(컨설팅) 통보 후 사업담당자는 '반영', '미반영' 체크 후 종료	해당부서 사업담당자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 분석평가책임관	반영결과 관리	해당부처(부서)에서 개선의견을 반영여부 확인 및 점검 * 상·하반기 2회 점검(여성가족부) * 최종결과는 익년 종합분석결과보고서에 반영·제출 (분석평가책임관)	분석평가책임관

사. 분석평가서 작성 서식

(기관명)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분석평가 항목	점검	점검포인트(예시)*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 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점검포인트(예시) : GIA시스템에서 점검포인트별로 커서를 대면 구체적인 예시가 별도 창으로 구현됨			종료 ▶

(GIA시스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분석평가 항목	점검	(CLICK ▶) 주역할 (여성은 가사와 육아 돌봄 등 집사람, 남성은 직업활동과 경제적 부양자 등 바깥사람), 직업 (남성은 회사 중역 등 사회지도층, 여성은 비서나 보조적인 직업), 취미 (여성은 음악이나 문학, 남성은 스포츠나 게임), 비용 부담 (여성은 혼수, 남성은 신혼집과 데이트 비용) 등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분석 평가			
성역할 고정관념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CLICK ▶) 미망인, 김치녀, 된장녀, 출가외인, 삼일한, 남성은 울지않는다, 남자가 그것도 못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등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CLICK ▶) ▶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부당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부모, 연인, 친구 등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암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CLICK ▶) ▶ 여성은 예쁘고 날씬해야 한다, 짹짹뽕 등 외모 관련 표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CLICK ▶) ▶ 남성은 책임감 강하고 과중한 짐을 떠안으며 업무에 바쁜 존재로, 여성은 외모·쇼핑에 관심을 집중하는 허영심 많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표현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CLICK ▶) ▶ 여성은 항상 잘 몰라서 질문하고, 남성은 질문에 답하는 역할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CLICK ▶) ▶ 육아휴직 중인 남성이나 전업주부 남성,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남성을 희화화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종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가. 법령·계획·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1-1. 개선사항 없음(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p> <p>○○○○○○○○ 귀하</p>				

1-2. 개선사항 없음(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1234-△△△△)</p> <p>○○○○○○○ 귀하</p>				

2-1. 자체개선안 동의(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처명)	* 해당 부서가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 자체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법령(지침 포함) 개선 - 예산반영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개선 등 (예시)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3-2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다만, 향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개선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p> <p>○○○○○○○○ 귀하</p>				

2-2. 자체개선안 동의(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부서가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 자체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법령(지침 포함) 개선 - 예산반영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개선 등 (예시)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3-2의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다만, 향후 관련 전문가 인력풀의 성별 균형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개선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1234-△△△△)</p> <p>○○○○○○○ 귀하</p>				

3-1. 개선의견(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기관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여성가족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에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 위촉한다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 회는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3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여성가족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p> <p>○○○○○○○○ 귀하</p>				

3-2. 개선의견(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수정 가능)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 시스템 자동부여(수정 가능)			
주요 분석평가 내용 (제출부서명)	* 해당 기관이 분석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기관에 제시할 개선의견을 작성 (예시) 분석평가서 점검포인트 3-2와 관련한 개선의견으로,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계획·사업 내용)	개선안 (법령 수정안, 계획·사업 개선 내용)	검토사유
	1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 위촉한다	제○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 회는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3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분석평가책임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1234-△△△△)</p> <p>○○○○○○○ 귀하</p>				

나. 법령·계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1-1.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을 항목별로 작성	반영계획 내용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에 대해 해당기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항목별로 작성		
2	개선의견 내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반영계획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관장</p> <p>여성가족부장관 귀하</p>				

1-2.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불가)				
정책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소관부서	기관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부서명	※ 시스템 자동 부여(수정 가능)			
	담당자명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전화번호	※ 시스템 자동 부여 (수정 가능)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시한 개선의견을 항목별로 작성	반영계획 내용 *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에 대해 해당기관이 어떻게 반영할지를 항목별로 작성			
2	개선의견 내용	반영계획 내용			
3	개선의견 내용	반영계획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부서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div>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서식

1-1. 정부홍보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컨설턴트 검토의견 통보서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세부사업명					
홍보주제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평가 항목	개선필요	해당부분		개선의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카 피		카 피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카 피		카 피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 미 지		이 미 지	
		카 피		카 피	

1-2. 정부홍보사업 분석평가 관련 산하기관 배포용 점검표

홍보물 양성평등한지 점검해봐요!

분석평가 항목	점검	점검포인트(예시)	점검결과
▶ 등장인물 기획 시 남녀비율, 연령구성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보고 점검을 시작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 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 성별을 기준으로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가?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원안유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요청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 추진

◆ 컨설팅 요청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문의 : 02) 3156-7229

메일 : hongbogia@kwidimail.re.kr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법 제9조, 영 제6조)

가. 작성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제출 기한 : 다음연도 2월말까지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2017년 2월말까지 제출

다. 작성 내용

- 전년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작성
 - 법령·계획·사업별 분석평가 추진 현황
 - 법령·계획·사업별 주요개선실적 및 향후개선계획
 - 분석평가를 통한 자체개선사례
 -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 * 우수사례 제출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추천사례 포함
- 개선실적 점검
 - 법령 : 2012~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계획·사업 : 2015~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2015년 동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참고사항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 선정 시 반영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충실성’은 우수기관 평가항목에 포함할 예정
 - 우수사례는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의 기관별 정책개선 우수사례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포상 주요 기준

- BSC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여부
- (지자체)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활성화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작성의 충실성
-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여부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 시설·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 '17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서식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소관 부서	기 관 명		
	작성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I.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건)

구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전체(=1+2+3+4)					
1. 제외대상					
평가 대상	2. 원안동의				
	3. 자체개선				
	4. 개선의견				
	반영결과	계			
		수 용			
		불 수 용			
		일부수용			
중 단					
4. 기타(미완료 등)					

* ①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 : 건

②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비예산사업 수 : 건

※ ①+②는 위 표의 전체 사업 수와 같아야 함

□ '16년 분석평가서 작성 사업 중 '17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단위: 건)

연번	분석평가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 내역사업)	예산액 ('17년 예산, 백만원)	성인지예산서 상 사업명	사업유형 (단위·세부· 내역사업)	예산액 ('17년 예산, 백만원)
1	(예시)	세부사업	(예시)2,500	(예시)	단위사업	(예시)2,500
2						
3						

*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17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위 비교표에 기재

□ 총평

○ 주요실적 및 성과

(작성예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확립
 - * 조례 제정, 예산 배정, 실무담당자의 전담전문인력 지정(전문직위 지정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BSC 반영 여부 등을 위주로 작성
- 고위자 및 중견관리자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작성예시)

- 실질적인 정책개선 미흡(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 미흡)
- 교육의 인원수 증가에 비해 실질적인 분석평가 교육 미흡
- 주요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미구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미흡 등

Ⅱ. 정책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 과제)

○ 법령

순번	관리번호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12~'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법령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법령의 개선결과 기재

○ 계획

순번	관리번호	계획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15~'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계획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계획의 개선결과 기재

○ 사업

순번	관리번호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15~'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사업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사업의 개선결과 기재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순번	연도	과제명	권고내용	반영결과

※ '12~'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기재

Ⅲ. 자체개선 이행결과

○ 법령

순번	관리번호	법령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계획

순번	관리번호	계획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 사업

순번	관리번호	사업명	분석평가 실시 전	분석평가 실시 후

IV. 정책개선 우수사례*

* 정책개선 우수사례 선정 기준 : ① 성평등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 선정 ② 분석평가서 작성의 우수성(분석평가 지표의 이해도, 성인지 통계의 활용 여부, 성인지 예산서와의 연계 정도)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추천사례를 포함하여 제출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유공자 포상 심사자료가 되므로 충실히 작성·제출

순번	1	정책명	법령, 계획 또는 사업명
관리번호	2016C국토000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		
주요 정책개선 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주요 개선 내용		

※ 사례 추가 가능

붙임자료 :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요령

I. 분석평가 추진 현황(총괄)

□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 전체 : 제외대상 + 원안동의 + 자체개선안동의 + 개선의견 + 기타(중단 등) 건수의 합계
 * GIA시스템 > 종합현황판 > 분석평가 현황 > 총괄의 기관별 총계와 일치하여야 함
 - 제외대상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분석평가 종료
 - 원안동의 : 검토의견 통보 결과 ‘원안동의’인 건수
 - 자체개선안동의 : 검토의견 통보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인 건수
 - 개선의견 :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의견’인 건수
- 반영결과
 - 반영결과 계 : 개선의견의 건수와 일치하여야 함
 -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 GIA시스템>종합현황판>분석평가 현황>개선 현황>반영결과의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에 대한 기관별 결과와 일치해야 함
- 기타 : 검토의견 미통보 등의 사유로 분석평가가 종료되지 못한 경우
- 성인지예산과의 연계 의무화에 따른 현황 표기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사업 수와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한 분석평가 사업 수는 일치하여야 함

□ '16년 분석평가서 작성 사업 중 '17년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사업*

-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17년 성인지 예산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의 경우 비교표에 기재

□ 총 평

- 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기재

II. 정책 개선 현황(반영결과가 수용/일부수용인 과제)

- I. 분석평가 추진 현황 : 총괄표 상의 개선의견 반영결과가 수용 또는 일부수용인 과제를 모두 작성 (*불수용은 제외)
 - * 법령 : 2012~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 계획·사업 : 2015~2016년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통보 과제 중 개선예정 또는 미완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2012~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한 과제 중 미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결과 작성
- 주요 개선실적 :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이 완료된 실적
향후 개선계획 :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개선할 예정인 내용
- 해당 과제 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하여 작성

III. 자체개선 이행결과

- 해당 기관/부서에서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작성
 - * GIA시스템>종합현황판>분석평가 현황>자체개선 현황 결과와 일치되게 작성
- 분석평가 실시 전 : 해당 정책의 성평등 문제점 등을 작성
분석평가 실시 후 : 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한 실적을 작성
- 해당 과제 수에 맞추어 줄을 추가하여 작성

IV. 정책개선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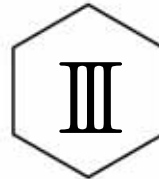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기관별로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정책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법령, 계획, 사업의 주요 내용 기재
 - * 제출한 정책개선 우수사례는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선정의 토대가 됨
 - * 우수사례 선정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추천사례 포함

□ 주요 정책개선 내용

- 해당기관/부서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내용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한 내용을 모두 기재
- 향후 개선계획은 해당부처/부서가 분석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자체 도출한 개선계획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할 개선 계획을 모두 기재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법 제10조 및 영 제7조)

가. 실시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법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0조의2*)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7. 6. 21. 시행)

나. 대상 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다. 대상 정책

- 시행 중인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사업 등

라.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국민 및 NGO 대상 과제 발굴 공모,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정책 선정
 - * 부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참석 가능

마.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평가를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
 - * 대상정책 소관기관은 관련자료 제출, 연구용역 보고회, 자문회의 등 참석 협조
 - ** 전문연구기관 등의 특정평가 시행과정에 현장전문가, NGO 등 의견수렴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 특정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 *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개선 권고(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사.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며,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상정책 선정 및 정책개선 추진사항을 점검
 -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통하여 대상정책 선정, 추진방법 등 컨설팅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개정 법 제10조의2 제3항)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법 제11조 및 영 제8조)

III

가. 정책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실시
 -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
- ※ 의견표명은 '17.6.21.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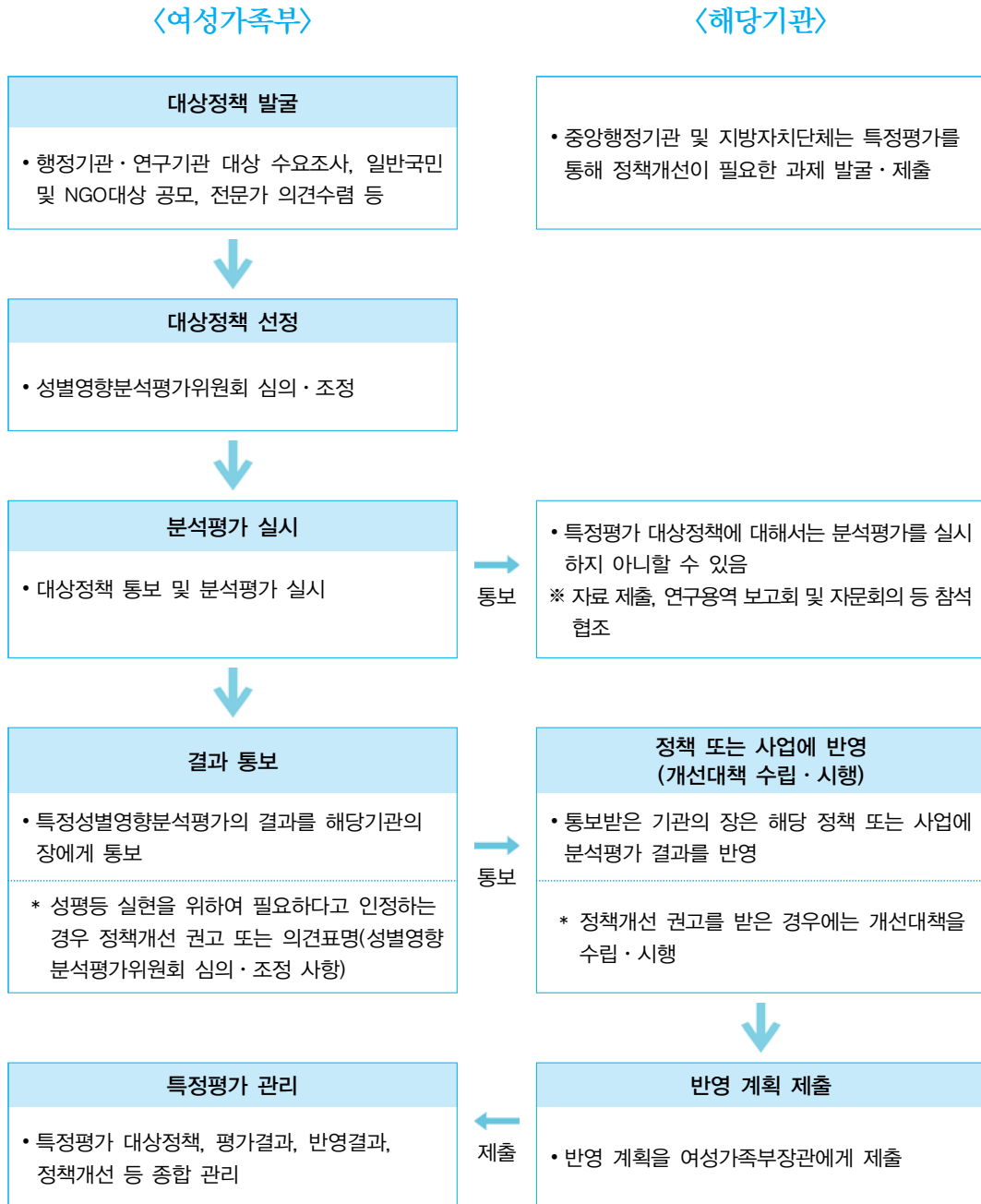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개선대책은 법령 제·개정, 규정·지침 등 반영, 사업추진 방식 개선, 예산 반영 등 기관의 특성 및 정책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 특정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특정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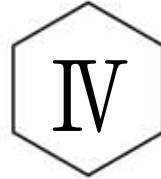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정 책 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대상기관	기관명	
	부서명	
	분석평가 기간	○○○○. ○○. ○○. ~ ○○○○. ○○. ○○.
분석평가의 필요성		
분석평가 주요결과	※ 분석평가서 첨부 가능	
정책개선 권고	권고사항	
	반영계획 제출기한	
	추진실적 제출기한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02-2100-0000)</p> <p>○○○○ 귀하</p>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 결과 통보서의 관리번호 기재	
정 책 명			
소관기관		기관 · 부서명	
		부서장명 /전화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	
분석평가내용 (요약)	분석평가 주요내용	※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통보한 내용을 정리	
	정책개선 권고사항	※ 통보된 결과에 정책개선 권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반영계획	분석평가 결과 반영계획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 내용을 해당 정책에 반영 계획을 기재	
	정책개선 대책	○ 정책개선 내용(완료시기) ※ 정책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 · 시행한 내용 (정책개선 권고 내용과 대응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기관명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div>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6. 민관협력체계 구축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IV

1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

가. 설치 및 기능

- 1)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둔

2) 기능

○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 개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15.1.12.)로 중앙위원회 기능에 포함됨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0조 및 영 제11조)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행정자치부 · 여성가족부 · 국무조정실 · 법제처의 분석평가 책임관
 -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 ※ 민간위원 위촉 시 현장활동가 포함

2) 임 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3)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의2)

가. 설 치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둠

나. 기능, 구성 및 운영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 해당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지방위원회는 분석평가 제도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는 중앙위원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하는 것이 필요함
 -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법제처)

2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법 제14조, 영 제12조)

가.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함
-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GIA시스템>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실적>분석평가책임관 등록 메뉴 이용

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무를 총괄함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실무담당자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실무담당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기관별 분석평가 운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가. 평가기관의 기능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총괄 및 관리 지원
 - 지역센터 관리·지원(지역센터 예산·사업배분, 실적 평가·보고·모니터링 등)
 - 센터 미지정 지역 관리 및 지원(인근센터 등에 지정 및 연계)
 - 지역센터 컨설팅지원 및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사업 총괄지원 및 컨설턴트 관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자문
 - 심층분석 및 정책개선 모니터링 운영
 -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 컨설팅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등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개선 지원
 - 평가지표, 분석기법 개선·개발 지원
 - 제도 운영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우수사례 발표회(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홍보
 -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대국민공모 포함) 및 연구전략 개발 지원
- 전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워크숍 및 포럼 개최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V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평가기관의 지정

- 1)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 2)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4) 지정 대상

- 다음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연구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17.6.21. 시행)
 - 국공립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지정 절차



*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운영안내』 참조

평가기관 지정현황('16. 12월 기준, 16개 지역 총 17개소)

지 역	구 분	기 관 명	지 정 기 간
서 울	중 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 5. 10 ~ '18. 5. 9
서 울	지 역	서울여성가족재단	'15. 11. 5 ~ '17. 12. 31
부 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5. 11. 5 ~ '17. 12. 31
대 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5. 6. 25 ~ '18. 6. 24
인 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6. 1. 10 ~ '18. 12. 31
광 주		광주여성재단	'16. 9. 5 ~ '18. 12. 31
대 전		대전세종연구원	'15. 3. 20 ~ '18. 3. 19
울 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15. 5. 21 ~ '18. 5. 20
경 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5. 5. 10 ~ '18. 5. 9
강 원		강원여성가족연구원	'16. 6. 1 ~ '18. 12. 31
충 북		충북여성발전센터	'15. 9. 7 ~ '17. 12. 31
충 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5. 5. 10 ~ '18. 5. 9
전 북		전북연구원	'15. 5. 21 ~ '18. 5. 20
전 남		전남여성플라자	'15. 11. 5 ~ '17. 12. 31
경 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5. 1. 15 ~ '18. 1. 14
경 남		창원대학교	'15. 3. 20 ~ '18. 3. 19
제 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5. 1. 1 ~ '17. 12. 31

4

성별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관련)

가. 개 요

- 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GIA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추진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정보지원체계 구축
-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8조제2항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사이트주소 : <http://gia.mogef.go.kr>(행정망 및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
* (행정망IP) <http://10.188.131.175>

○ 권한구분

그 룹	권 한	내 용
공무원	업무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계획, 사업 담당자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반영결과 제출서 작성·제출
	기관담당	해당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총괄 - (공통)기관별 종합결과보고, 교육실적 및 분석평가책임관 현황 등록 - (지자체)검토의견 통보, 반영결과 관리
	운영담당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등
	관리담당	여성가족부의 GIA시스템 관리자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	컨설팅 과제 열람 및 작성
	분석 전문가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 컨설턴트이면서 분석전문가인 경우 분석전문가로 회원가입
	센터담당	센터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시스템으로 관리

* 상위 권한에는 하위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

- 공 무 원 : 관리담당 > 운영담당 > 기관담당 > 업무담당
- 외부전문가 : 센터담당 > 분석전문가 > 컨설턴트

IV

나. 특 징

- 한글 적용
 -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결과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는 한글 적용하여 작성, 편집, 다운로드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전자결재 연계(결재 단계에서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
 - 대상기관
 - 온나라 시스템 사용 기관
 - 서울행정시스템 사용 기관 중 전자결재로 온나라를 사용하는 기관
 - * 이외의 기관은 GIA시스템 내부결재 기능을 이용하여야 함
 - 기안 단계에서 '연계기안' 선택 후 온나라에서 결재, 전송하면 GIA시스템의 해당 과제는 자동으로 제출로 상태가 변경됨
 - 해당 기관의 온나라 담당자가 시스템 간 '연계 환경설정'*을 하여야만 연계 가능
 -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 > 1. 온나라 연계 환경설정 자료 참조
- 앞 단계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체계
 -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 검토의견 통보서 → 반영계획 제출서
 - * 예) '검토의견 통보서' 작성은 앞 단계인 '분석평가서'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한 후에 가능하며, '검토의견 통보서'를 일단 작성·저장된 후에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바로 클릭하여 이후 절차 진행
-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GPKI인증서 등록 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요청자		승인권자
모든 업무담당	→	해당 기관의 기관담당
기초자치단체 기관담당	→	광역자치단체 기관담당
광역·교육청 기관담당, 운영담당, 센터담당	→	관리담당
분석전문가, 컨설턴트	→	해당 센터의 센터담당



다. 주요기능

- 분석평가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실시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계획 제출서,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 작성·승인 및 제출
 - 반영계획 관리
- GIA시스템을 통한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 현황·통계 관리
 - 기간별, 과제별 분석평가 실시현황(총괄)
 - 기간별, 과제별 개선의견 및 반영계획 현황
 - * 원안동의(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구분 통계 가능
 - 분석평가책임관 등록 현황
 - 교육실적
 - 컨설팅 실적
 - 종합결과보고 현황 등
- 2009년 이후의 분석평가 자료 조회 가능
 - * GIA시스템>참여마당>통합검색
- 알림마당, 공유게시판을 통한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의사소통 공간 제공

라. GIA시스템 사용도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만 우선 제출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체크리스트 작성 * 나의페이지>나의할일>분석평가대기>체크리스트작성 -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하여 작성	업무담당	
	↓		
	저장 ※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	업무담당	
	↓		
	기안 ○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 ○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	업무담당	
	↓		
	결재 → 전송 ○ 연계기안을 선택한 경우 -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연계됨 - 체크리스트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 -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 ※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 ※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 ○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 *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전송대기 -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완료	업무담당	
	↓		
접수	접수 * 나의페이지>나의할일>접수대기 ○ 체크리스트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	관리 담당	기관 담당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검토	체크리스트 검토 * 나의페이지>나의할일>분석평가대기>해당 과제의 체크리스트의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 ○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 통보' 클릭 ○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분석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분석평가서 제출요청' 클릭	운영 담당	기관 담당
	저장·기안·결재·전송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제외통보 시
분석평가 절차 종료

□ 분석평가서 작성대상인 경우 :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를 함께 제출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체크 리스트 & 분석 평가서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체크리스트작성 - 왼쪽 하단에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버튼을 클릭한 후 법령, 계획, 사업 선택 → 체크리스트 작성 → 저장 → 분석평가서 작성	업무담당	
	저장 ※ 기안 전에는 수정 가능	업무담당	
기안	○ 연계기안(온나라 사용기관) 또는 내부기안 선택 ○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절차 진행 가능	업무담당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결재 ↓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안 선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나라 연계기안함으로 기안문이 넘어감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및 법령안/계획안/사업계획서는 자동으로 기안문의 붙임으로 첨부됨 - 일반문서처럼 결재상신, 승인, 발송 진행 ※ 기안문의 문서정보를 '내부결재'에서 '대내외시행'으로 변경 ※ 온나라에서 승인·발송되면 GIA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승인·제출 됨 ○ 내부기안을 선택한 경우 <div>* 팝업창에서 결재자 선택 및 내부 기안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결재대기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전송대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대기 화면에서 전송까지 해야 제출 됨 	업무담당	

접수	<p style="text-align: center;">분석평가서 접수</p> <div>*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접수대기</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는 모두 접수대기로 보내짐 ○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담당자 지정 	관리 담당	기관 담당

검토 의견 통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작성 시 <div>*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나의과제 > 해당 과제의 분석평가서 상태값인 '제출' 클릭 후 내용 확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검토의견 요청' 클릭 - 분석평가서 작성 대상이 아닌 경우 오른쪽 하단의 '완료(제외)통보' 클릭하여 절차가 종료됨을 안내 -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오른쪽 하단의 '검토의견통보서 작성' 클릭하여 작성 * 검토 결과에 따라 왼쪽 상단의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양식 자동 변경됨 ○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div>*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 > 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div> 	운영 담당	기관 담당



IV

단 계	주 요 내 용	권한구분	
		중앙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통보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 		
	↓		
	저장 · 기안 · 결재 · 전송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반영 계획서	○ 최초 작성 시 * 나의페이지>나의할일>분석평가대기>해당 과제의 검토의견통보서 - 검토의견통보서의 상태값인 '통보(개선)'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오른쪽 하단의 '반영계획서 작성' 클릭	업무담당	
	○ 저장 후 수정하려는 경우 * 나의페이지>나의할일>분석평가대기>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서 - 반영계획서의 상태값인 '작성' 클릭 후 수정		
	↓		
	저장 · 기안 · 결재 · 전송 ※ 분석평가서 제출 절차와 동일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반영 계획 확인	* 나의페이지 > 나의할일 > 분석평가대기>해당 과제의 반영계획서 - 반영계획서의 상태값인 '제출' 버튼 클릭하여 내용 확인 후 왼쪽 상단의 <input type="radio"/> 수용 <input type="radio"/> 일부수용 <input type="radio"/> 불수용 <input type="radio"/> 중단 중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의 '확인' 버튼 클릭 - '수용'이나 '일부수용'인 경우 개선항목 수 및 항목 선택 - '불수용'이나 '중단'인 경우 그 이유 입력	운영 담당	기관 담당
	↓		
반영 계획 관리	* 성별영향분석평가>분석평가>반영계획관리 - 주요내용, 개선의견, 반영의견 등 입력 ※ 반영계획 확인 및 입력을 하여야만 과제가 종료됨 ※ 종합현황판>분석평가현황>개선현황에서 전체 내용 확인 가능	운영 담당	기관 담당

마.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전문가 검토

컨설팅		분석평가서 검토	
단 계 (권한구분)	주 요 내 용	단 계 (권한구분)	주 요 내 용
컨설팅 요청 (업무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서 등의 작성 단계에서 컨설팅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요청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 요청도 가능 <p>* 나의페이지>나의할일>나의컨설팅>일반컨설팅 요청 버튼 클릭</p>	전문가 검토의견 요청 (기관담당) *중앙 : 운영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 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분석평가서의 상태값인 '제출'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오른쪽 하단의 전문가 검토 의견 요청 버튼을 클릭 ※ 클릭 시 뜨는 메시지창에 검토 요청 내용 입력 - 중앙은 선택, 지자체는 필수입력



중앙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자동 요청됨

접수 (센터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및 전문가 검토를 담당할 컨설턴트 및 분석전문가를 지정 * 지정을 위해서는 컨설턴트와 분석전문가가 소속 센터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
--------------	--



컨설팅 (컨설턴트)	<p>* 나의페이지>나의할일>컨설팅 대기</p> <p>컨설팅 내용을 작성하고 컨설팅 실적을 등록</p>	전문가 검토 (분석전문가)	<p>* 나의페이지>나의할일>분석평가 대기</p> <p>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을 작성 후 기안 → 센터 내 결재자가 수정 및 제출</p>
---------------	---	----------------------	---

바. 시스템 이용 문의 : GIA시스템 콜센터(☎1566-3287, 02-3789-4450)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 GIA시스템 > 참여마당 > 공유게시판에 탑재

5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법 제15조, 영 제13조)

가. 개 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횟수 : 연 1회 이상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수적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 실시 및 참여를 강화하여야 함
 - 특히 각 기관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여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 반영됨

나. 2017년도 교육과정(여성가족부 주관)

- 여성가족부에서 계획 수립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후 별도 문서를 통하여 교육수요 조사

IV

구분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총계 18개 과정					
기본 교육	소계 3개 과정				
	관리자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	3월, 6월 9월, 11월
		고위정책과정(4급 이상)		중앙 및 지자체 4급 이상 공무원	3월, 6월 9월, 11월
		관리자과정(5급)		중앙 및 지자체 5급 공무원	3월, 6월 9월, 11월
	소계 6개 과정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성별영향분석 평가 통합교육	기본 과정(1일)	중앙 및 지자체 분석평가 실무담당 공무원	2월, 7월 10월
			심화 과정(2일)		
		사업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중앙 공무원	5월
		사업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기본교육	지자체 공무원	5~6월, 10~11월
			실습형교육		7월, 9월
		법령 및 계획 관련 업무담당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3~6월 9~10월
	소계 4개 과정				
	성인지 예·결산 교육	성인지결산 사업담당자	중앙 부처 공무원		1월
			지자체 공무원		3월
		성인지예산 사업담당자	중앙 부처 공무원		5월
			지자체 공무원		9월
전문 교육	소계 3개 과정				
	컨설턴트 교육	컨설턴트 양성과정		신규 컨설턴트	3월
		컨설턴트 보수 기본과정		기존 컨설턴트	4월, 6월, 11월
		컨설턴트 보수심화과정		기존 컨설턴트	7월
워크숍	소계 1개 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워크숍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센터	3월~4월
순회 교육	소계 1개 과정				
	찾아가는 순회교육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회 공무원 등	상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다. 내 용

- 당해연도 분석평가 추진방향 및 지침 이해
- 분석평가 및 정책의 성별 관련성 이해
- 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이해
- 정책·예산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작성
- 사업유형별 분석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실습 등

라. 교육 관리

- 각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교육을 총괄하며, 매년 교육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교육실적 제출시기
 - 연간(1.1.~12.31.) 교육실적 :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제출
 - * GIA시스템>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실적>교육실적 메뉴 이용

○ 교육실적 제출서식

기관명	구분	교육인원(명)							교육참석 여부			
		소계			5급 이상		6급 이하 (기타)		분석평가 책임관		실무담당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합계								-	-	-	-
	자체교육 (기관입력)											
	위탁교육 (여성가족부 입력)											
	찾아가는 순회교육 (여성가족부 입력)											

* 합 계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교육, 기타교육 참석 인원을 모두 합한 인원

(ex. 3회 실시한 교육에 총 100명이 참석하였다면 합계는 100명)

* 자체교육 :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직장교육,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회 등으로 실시한 교육

(강사초빙, 내부강사 활용 가능)

* 위탁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찾아가는 순회교육 :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희망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

※ 분석평가책임관과 기관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경우 교육 참석 여부에 횟수나 인원을 표기하고, 교육 이수자의 5급 이상, 6급 이하에 인원 수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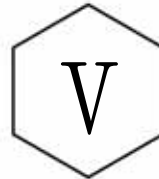
6

민관협력체계 구축(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앙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시민단체 참여, 과제 선정 시 대국민 공모 실시, 시민 제안, 시민 참여 모니터링 등

IV



참고자료

1. 관계 법령
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3.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
4.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1 관계 법령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 률	시 행 령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 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p>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법 률	시 행 령
<p>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해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p>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p>

법 률	시 행 령
<p>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개정 2016.12.20.></p> </div> <p>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p> <p>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p>	<p>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p>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p>

법 른	시 행 령
<p>할 수 있다. <개정 2014.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신설 2015.2.3></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p> <p>⑤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개정 2015.2.3.></p>	<p>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5.8.3></p>

법 률	시 행 령
<p>〈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12.20.]</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른	시 행 령
<p>〈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p> <p>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의견 표명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p> <p>[제목개정 2016.12.20.]</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p>	<p>제9조(종합분석보고서의 제출 및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종합분석보고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8></p> <p>[제목개정 2014.9.18]</p>
<p>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p>	
<p>제13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p>	<p>제10조(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8.3></p>

법 률	시 행 령
<p>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p> <p>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p>3의2.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분석평가결과와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p> <p>[제목개정 2015.2.3]</p>	<p>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p>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목개정 2015.8.3]</p>
<p>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2.3]</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p>

법 른	시 행 령
<p>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제목개정 2015.2.3.]</p>	<p>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5.8.3> 2. 삭제 <2015.8.3> 3. 삭제 <2015.8.3> 4. 삭제 <2015.8.3> 5. 삭제 <2015.8.3> 6. 삭제 <2015.8.3>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p>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법 률	시 행 령
<p>시행에 관한 사항</p> <p>5.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p> <p>6.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p> <p>[제목개정 2016.12.20.]</p> <p>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p> <p>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을 성별영향 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p>	<p>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전년도 분석평가 교육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3></p> <p>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18></p> <p>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중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p>

법 률	시 행 령
<p>지정할 수 있다.</p> <p>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div> <p>〈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p>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div> <p>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p>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 삭제 <2014.9.18></p> <p>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경력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p>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설 2014.9.18></p>

법 률	시 행 령
<p>부칙 <제11046호, 2011.9.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 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p> <p>부칙 <제12530호, 2014.3.24.></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13178호, 2015.2.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p><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17.6.21.시행)></p> <p>부칙 <제14443호, 2016.12.20.></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div>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p> <p>② 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여성가족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를 “교육부·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p> <p>⑥부터 ⑫까지 생략</p> <p>부칙 <제25616호, 2014.9.18.></p> <p>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p>



법 률	시 행 령
	<p>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p> <p>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p> <p>㉔부터 ㉔까지 생략</p> <p>부칙 〈제26469호, 2015.8.3.〉</p> <p>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p>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14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p> <p>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p> <p>제16조(성인지 예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p> <p>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p>	

법 률	시 행 령
<p>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성인지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 2.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 업무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p>② 성인지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p>③ 성인지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제14조(성인지 교육의 수탁기관)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성인지 예산의 개요</p> <p>2. 성인지 예산의 규모</p> <p>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해분석</p> <p>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p>
<p>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③ 생략</p>	<p>제10조(예산요구서의 내용)</p> <p>①~④ 생략</p> <p>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9. 생략</p> <p>10. 성인지 예산서</p>
<p>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8. 생략</p>	

법 른	시 행 령
<p>9. 성인지 예산서 10~14. 생략</p> <p>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②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p>	<p>제2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개요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3.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다.</p>

법 률	시 행 령
<p>제73조의2(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법 른	시 행 령
<p>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마. 지방회계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p> <p>1~3. 생략</p> <p>4. 성인지 결산서</p> <p>5~12. 생략</p> <p>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p>

바. 통계법(관련 조항)

법 률	시 행 령
<p>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p>② 생략</p>	<p>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p>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p>

법 률	시 행 령
<p>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p>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 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p> <p>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p>

법 률	시 행 령
	<p>(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p> <p>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p>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p> <p>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p>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p>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p>

법 률	시 행 령
	<p>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p>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p> <p>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 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p>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

00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석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〇〇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〇〇시·도/시·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〇〇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4조(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〇〇시·도·교육청/시·군·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〇〇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부교육감/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교육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가. 〇〇시·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00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전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사례

가. 법령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산업통상자원부

모성보호 및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저소득층 임산부 추가

행정자치부

무궁화대훈장 및 1등급훈장 도형 및 제식의 성별 훈장 형태 구분을 폐지하고 동일한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킴

* 「상훈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훈장크기 통일

국방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남군 1년 이내, 여군 3년 이내에서 개선하여 성별 구분 없이 ‘자녀 1명 당 3년 이내’로 변경

* 「군인사법」 제48조제3항, 제49조제3항



국민안전처

피난계획 수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재해약자)의 현황과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을 포함하도록 개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나. 사업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인천광역시

결혼이민여성의 의료기관 이용이 용이하도록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갖춰진 의료기관을 사업수행 기관으로 선정하고 통역시스템을 구축

*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병원 지정



통역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성별 균형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어촌체험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고 사무장 선정 위원회 운영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15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 개선

* 어촌6차산업화지원(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사무장 채용대상 마을 선정 시
여성사무장 채용 마을
우선 지원



사무장선정위원회 운영 시
여성 50% 이상
되도록 구성



농촌진흥청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효능 등을 연구·평가하도록 하고, 남녀를 구분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자료는 공공 DB에 포함하여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 눈근축찰을 이용한 비만과 황반변성 예방소재 특성 연구 사업

성별에 따라
대상자 구분하여
효능 연구·평가



임상시험 심사자료에
성별차이에 의한 분석지표
반영하도록 관련 지표 개선



다. 계획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노인 등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 수칙과 재난 안전매뉴얼 개발 및 배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15-2019 재난예경보 체계 구축계획

성별·연령별
특성 고려



재난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사례

구분	평가 전	평가 후
법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양성평등 방송문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은 추상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방송심의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3개항 → 5개항)하도록 개선권고 * 2016.12.2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 세대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신청 가능〉	
정책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선정 기준을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있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 일방(특히 여성배우자)은 제외되고, 부부 공동명의로도 임차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선정기준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개선하여 부부공동 명의로 하거나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 2015.7.2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6조제1항2호가목)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부) : 학부모의 학교활동 지원〉	
정책	학부모가 맞벌이 가정인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고, 학교참여 프로그램이 대부분 학교운영시간에 맞춰 개최되므로 학교참여가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들이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학부모 학교참여활동 모델 개발·보급, 학부모 학교참여활동의 운영시간대 다양화 등 개선 권고
정책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지자체) : 미혼한부모 지원근거 마련〉	
	한부모가족은 가구의 부양과 생계, 아동양육을 부 혹은 모 한명이 책임지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감면대상에 한부모 가족 추가, '미혼모가족지원 조례'를 '미혼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로 개정, '미혼한부모' 지원근거 마련

3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중장기계획 목록(2016.12. 기준)

□ 중앙행정기관(2017년 수립예정 계획) * 변경계획의 경우도 분석평가 실시 필요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현행 수립계획
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5년	2013~2017
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5개년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6조	5년	2013~2017
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	5년	2013~2017
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5년	2013~2017
5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5년	2013~2017
6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5년	2013~2017
7	고용노동부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법 제8조	5년	2013~2017
8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	5년	2013~2017
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소비자기본법 제21조	3년	2015~2017
10	교육부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5년	2013~2017
11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	5년	2013~2017
12	국무조정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	3년	2015~2017
13	국민안전처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소방기본법 제6조	5년	2013~2017
14	국민안전처	수난대피기본계획	수난구호법 제4조	5년	2013~2017
15	국방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5년	2013~2017
16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	5년	2013~2017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현행 수립계획
17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5년	2013~2017
1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5년	2013~2017
19	국토교통부	건설CALS기본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18, 19조	5년	2013~2017
20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5년	2013~2017
21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 계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5년	2013~2017
2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	2013~2017
23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5조	5년	2013~2017
2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종자산업법 제157조	5년	2013~2017
2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6년	2012~2017
2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5년	2013~2017
2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5년	2013~2017
28	농림축산식품부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5년	2013~2017
2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농촌진흥법 제5조	5년	2013~2017
30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2013~2017
31	미래창조과학부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뇌연구촉진법 제6조	5년	2013~2017
32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기반구축 종합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	2013~2017
33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 계획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 에관한법률제5조	5년	2013~2017
34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5년	2013~2017
35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경영 합리화기본계획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3년	2015~2017
36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2015~2017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현행 수립계획
37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5년	2013~2017
38	미래창조과학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5년	2013~2017
39	미래창조과학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2013~2017
40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방위사업법제33조	5년	2013~2017
41	법무부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5년	2013~2017
42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2013~2017
4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	5년	2013~2017
44	보건복지부	중장기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5년	2013~2017
45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5년	2013~2017
46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5년	2013~2017
47	보건복지부	결핵관리종합계획	결핵예방법 제5조	5년	2013~2017
48	보건복지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5년	2013~2017
49	보건복지부	묘지 등의 수급 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2013~2017
5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연금법 제4조	5년	2013~2017
51	산림청	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0년	2008~2017
52	산림청	도시림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10년	2008~2017
53	산림청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5년	2015~2017
54	산림청	사방사업 기본계획	사방사업법 제3조의2	5년	2012~2017
55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10년	2008~2017
56	산림청	산림교육 종합계획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	2013~2017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현행 수립계획
57	산림청	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법 제11조	10년	2008~2017
58	산림청	산림문화·휴양 기본 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10년	2008~2017
59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5년	2013~2017
60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관리기본 계획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5년	2013~2017
61	산림청	산지관리기본계획	산지관리법 제3조의2	10년	2013~2017
62	산림청	산촌진흥 기본계획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10년	2008~2017
63	산림청	임업진흥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10년	2008~2017
64	산림청	산림복지진흥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
65	산업통상자원부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민군겸용기술사업법 제4조	5년	2013~2017
66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2013~2017
6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산업융합촉진법 제5조	5년	2013~2017
6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법 제4조	5년	2013~2017
69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2015~2017
70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2013~2017
71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5년	2015~2017
7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	5년	2013~2017
7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	5년	2013~2017
74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2015~2017
75	중소기업청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3년	2015~2017
76	통계청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통계법 제5조의4	5년	2013~2017

연번	기관명	계획명	근거 법률	주기	현행 수립계획
77	통일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남북관계발전예관한법률 제13조	5년	2013~2017
78	해양수산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	5년	2013~2017
79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	5년	2013~2017
80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종합계획	도로명주소법 제5조	5년	2013~2017
81	행정자치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10년	2008~2017
82	행정자치부	온천발전종합계획	온천법 제3조의2	5년	2013~2017
83	행정자치부	도서종합발전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10년	2008~2017
84	환경부	석면관리 기본계획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	5년	2013~2017
85	환경부	습지보전기본계획	습지보전법 제5조	5년	2013~2017
86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	5년	2013~2017
87	환경부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5년	2013~2017
88	환경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5년	2013~2017

□ 광역자치단체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1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년	
2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10년	
3	광역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제12조	5년	
4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년마다, 10년간	특별자치 도지사만 해당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특별시장 제외
6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7조	5년	
7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5년	관계광역시장, 도지사
8	산림교육지역계획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년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5년	
10	지역산림병해충예찰·방제장기계획	산림보호법 제20조	10년	
11	지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	산림보호법 제45조의2	5년	
12	수목등의 보전관리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수시	
13	시도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14	지역별 (임업)진흥계획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10년	
15	지역산림계획	산림기본법 제11조	10년	
16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	5년	
17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5년	
1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5년	
19	경관계획	경관법 제6조	조례 명기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20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	5년	특별자치 도지사 제외
21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10년	
22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5년	
2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제17조	5년	
24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5년	도지사 제외
25	도종합계획	국토기본법 제13조	20년	특별, 광역시장 제외
26	광역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0년	
27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20년	도지사 제외
28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5년	(특별)도지사 제외
29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5년	
3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10년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년	
32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2조	5년	
33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년	(특별)도지사 제외
34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20년	도지사 제외
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10년	(특별)도지사 제외
36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	10년	
37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특별)도지사 제외
38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도지사 제외
39	지역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5년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4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도지사 제외
41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4년	
42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0년	
43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0년	
44	산업입지수급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0년	
45	산지관리지역계획	산지관리법 제3조의2	10년	
46	소기업 지원계획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3년	
47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10년	특별자치 도지사만 해당
48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	10년	도지사 제외
49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도법 제6조	5년	
50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5년	
51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10년	특별자치 도지사만 해당
52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5년	
53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 제7조	5년	
54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년	(특별)도지사 제외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56	묘지 등의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조	5년	
57	시도주택종합계획	주택법 제8조	10년	
58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5년	
59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5년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60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9조	10년	(특별)도지사 제외
61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4년	
6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법 제6조의2	10년	
63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5년	
64	토양보전지역계획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10년	
65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 제9조	10년	
66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20년	도지사 제외
67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	5년	
68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한강수계 상수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5년	
69	시도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3	10년	

□ 기초자치단체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1	기초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제12조	5년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년마다, 10년간	(부여, 공주, 경주, 익산)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특별시 자치구 제외
4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5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개선지구
6	지역산업진흥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5년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장
7	경관계획	경관법 제6조	조례 명기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8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0년	
9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10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10	기초생활권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5년	구청장 제외
11	공중 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1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제17조	5년	
13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14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0년	구청장 제외
15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20년	구청장 제외
16	도시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5년	구청장 제외
17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5년	
18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10년	특별시의 자치구 제외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1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년	
20	도로정비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5년	군수만 해당
21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2조	5년	시장
22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
23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20년	구청장 제외
24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10년	구청장 제외
25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10년	군수, 구청장 제외
26	지방대중교통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27	물 재이용 관리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5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29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4년	
30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0년	
31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0년	
32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10년	
33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	10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34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	5년	
35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10년	
36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 제11조	5년	
37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5년	구청장 제외
38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5년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수립주체
39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5년	구청장 제외
40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41	묘지 등의 수급계획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조	5년	
42	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년	
43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5년	
44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9조	10년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만 해당
45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3조	4년	
46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법 제6조의2	10년	
47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5년	구청장 제외
48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	20년	광역시 군수 및 구청장 제외
49	시군구환경보전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	10년	

V

참고자료

□ 시·도교육청

연번	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주기
1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5년

4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가. 국내 사이트

☐ 성인지 통계정보시스템(<http://gsis.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6년 개발·구축한 성인지 통계 정보 포털.
본 시스템은 기존 통계를 영역별로 재정리하고 있으며, 모든 지표를 성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지역 성인지 통계DB(<http://gsis2.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7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일환으로 구축한 지역 성인지 통계DB.
본 DB는 지역 성인지 통계뿐 아니라 도표로 보는 지역 성인지 통계, 지도로 찾아가는 지역 성인지 통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에 접근할 수 있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내외 주요 통계를 영역별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국가통계에 대한 통합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음

☐ 교육통계서비스(<http://cesi.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관련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정책통계, 교육예측통계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DB가 구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HOME> 정책자료> 통계자료 : 여성가족부 승인통계, 성차별, 성폭력 등 여성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함

나. 국외 사이트

- ☐ UNECE Gender Statistics Website(<http://www.unece.org/stats/gender>)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회원국 통계청과 연합하여 개발한 성인지 통계 웹사이트로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
- ☐ Gender Stats(<http://www.worldbank.org/genderstats>)
 World Bank가 운영하는 성인지 통계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국가 통계와 UN 데이터 베이스, World Bank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사회조사 내용들을 제공함
- ☐ OECD SIGI(<http://www.genderindex.org>)
 OECD Development Centre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양성평등의 이론적 개념, 경험적 근거 및 정책적 측면 등 포괄적인 이슈들을 다루며, 특히 통계와 측정도구에 초점을 둠
- ☐ UN WOMEN(<http://www.unwomen.org>)
 UN의 여성정책 통합사이트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UN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함
- ☐ UNSD(<http://unstats.un.org>)
 UN 통계처 사이트로 UN의 여성과 남성 관련 사회지표 등 UN 통계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책자 및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정보를 제공함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발 행 일 2017년 1월
발 행 인 강 은 희
발 행 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 화 (02)2100-6172~78
팩 스 (02)2100-6482
홈페이지 www.mogef.go.kr
인 쇄 처 중앙기획 · 인쇄 (02)736-2866~7

